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2018년 5월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2018년 5월

순서

1. 변화

08_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2.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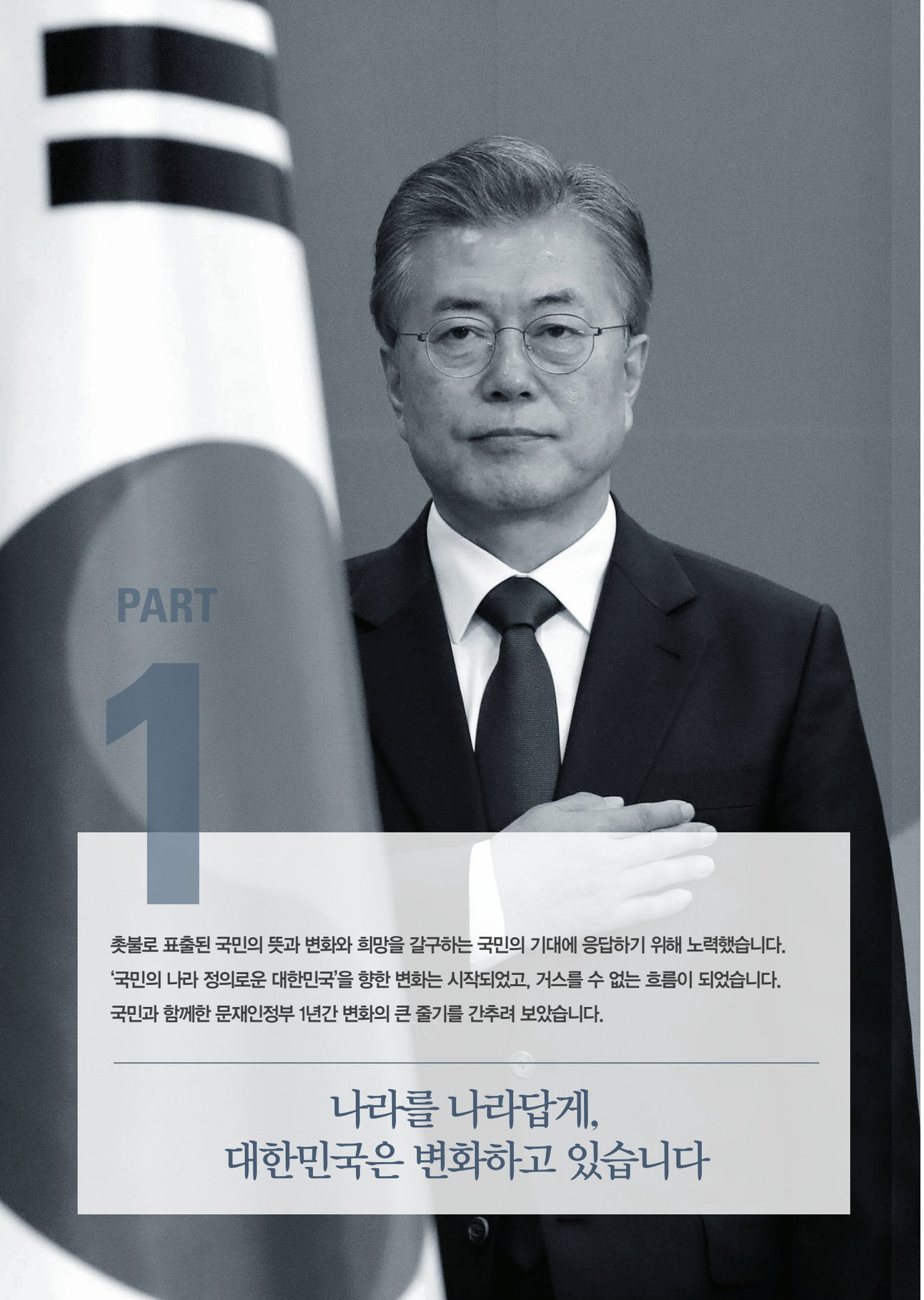
20_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3. 숙제

94_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4. 부록

110 _ 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정부 1년



PART

1

촛불로 표출된 국민의 뜻과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는 시작되었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문재인정부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

1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 번영의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다.

2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다.

3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다지다.

4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5 고르게 발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을 위한 토대를 닦다.









01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 **번영의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다.

1 _ 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 악수

2 _ 2018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3 _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18.2.9)

4 _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평화의 집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제 제재로 평창올림픽마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끈질긴 설득이 긴장과 위기의 한반도에 봄을 열었습니다. 이제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이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는 평화지대로, 군사 충돌의 서해는 평화수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는 굳건해질 것이며, 가을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속한 정상외교의 복원과 굳건한 안보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흔들리던 한·중관계를 회복하여 동북아 외교를 정상화 했습니다. 남방과 북방으로 외교의 폭도 넓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의 신속 타결, 미국 철강관세 면제 조치 등을 이끌어 경제의 불안 요소를 조기에 해소했습니다. 또한, 국방비를 확충하고 탄도미사일 탑재중량 제한 해제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사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앙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반도 안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넘으며 점선으로 바꾼 휴전선을 남북이 얼굴을 맞대는 ‘평화의 선’, 남북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번영의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전쟁 공포가 없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가겠습니다.

02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다.

1 _ 광화문 촛불집회
2 _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8.4.18)
3 _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17.6월)
4_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7.5.18)









촛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변화의 힘'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이게 나라냐?"란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해 온 기간이자,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하신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과거의 적폐를 없애가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엄단하고, 실력위주의 공정한 채용제도('블라인드 채용')를 확산해 가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겐 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인권·안전·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혁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해주신 의견을 종합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도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질문과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하며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재평가와 온전한 계승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근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왜곡되고 훼손된 역사를 바로 세우며,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는 작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께서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정부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을 서리와 같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참여를 우선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03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다지다.



1_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18.4.4,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2_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현장방문 ('17.8.9, 서울 성모병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문재인케어')하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온종일 돌봄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육아와 보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등 생애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의 기본 조건인 안정된 주거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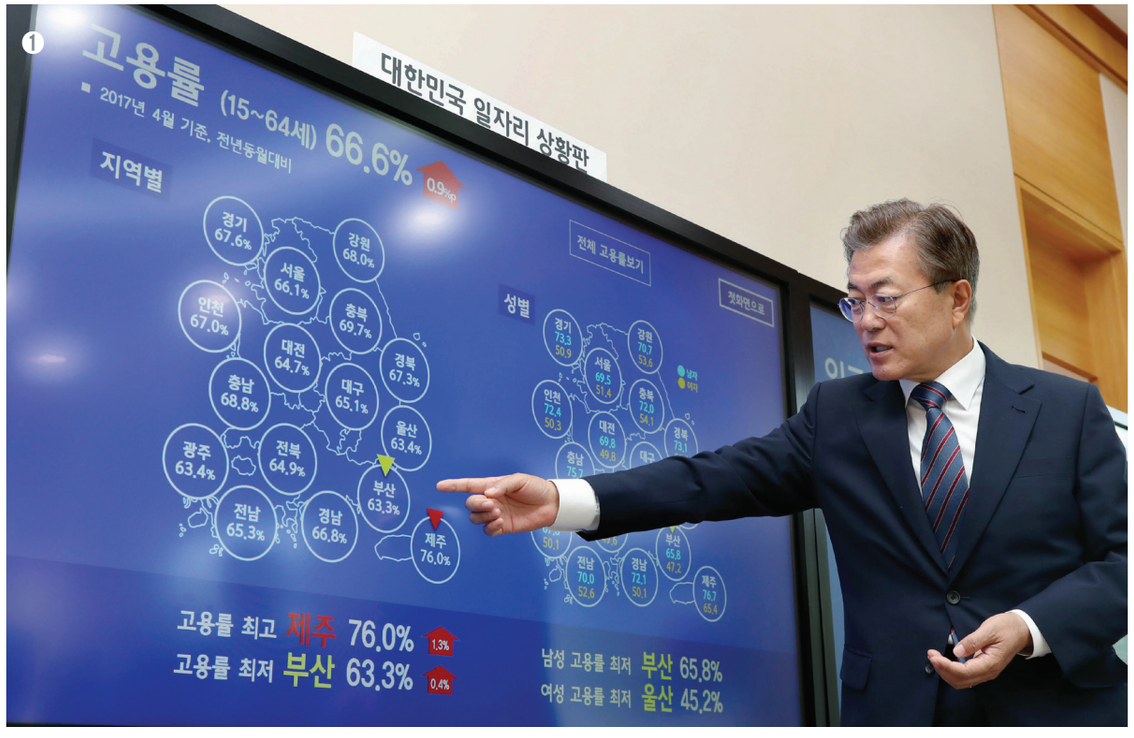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의 성숙도라는 인식 아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장애등급제도도 폐지합니다. 또한, 한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장관급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여 유리천장을 깨는 데에도 국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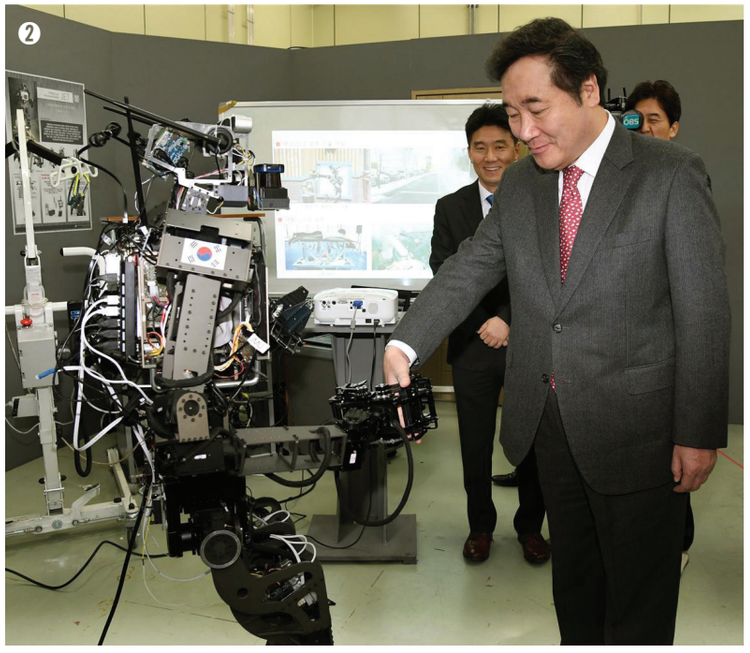
국가가 지켜주는 '안전한 사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화재로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소방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께서 염려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사람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에는 육아를 위해 경력을 포기하는 여성도, 세월호의 비극도,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미투(Me Too)'도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작은 일을 지나치지 않고, 큰 일이라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민 모두가 '내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믿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_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설치 ('17.5.24)
2 _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17.11.30, 광교 테크노밸리)



04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현장'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청년이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주거대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청년 모험펀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특단의 청년대책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혁신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R&D 예산 편성 방식을 혁신성장에 맞추어 개편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대학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재도전을 지원하는 혁신펀드도 조성해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없이는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쟁구조와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방지, 4대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상가 임차인 보호 등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복원할 것입니다.

05 고르게 발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을 위한 토대를 닦다.

지역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입니다.

지역의 자치권이 불합리하게 제약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나라는 국민과 나라의 힘을 한데 모으기도, 국가발전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❶



❷

1 _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17.10. 26, 여수)

2 _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17.11.22, 부산 벡스코)

'모든 지역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국정목표로 삼은 이유입니다.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강력한 지방분권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고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 비전에 따라 과제를 확정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은 분권과 포용, 혁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 생기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하고 지역혁신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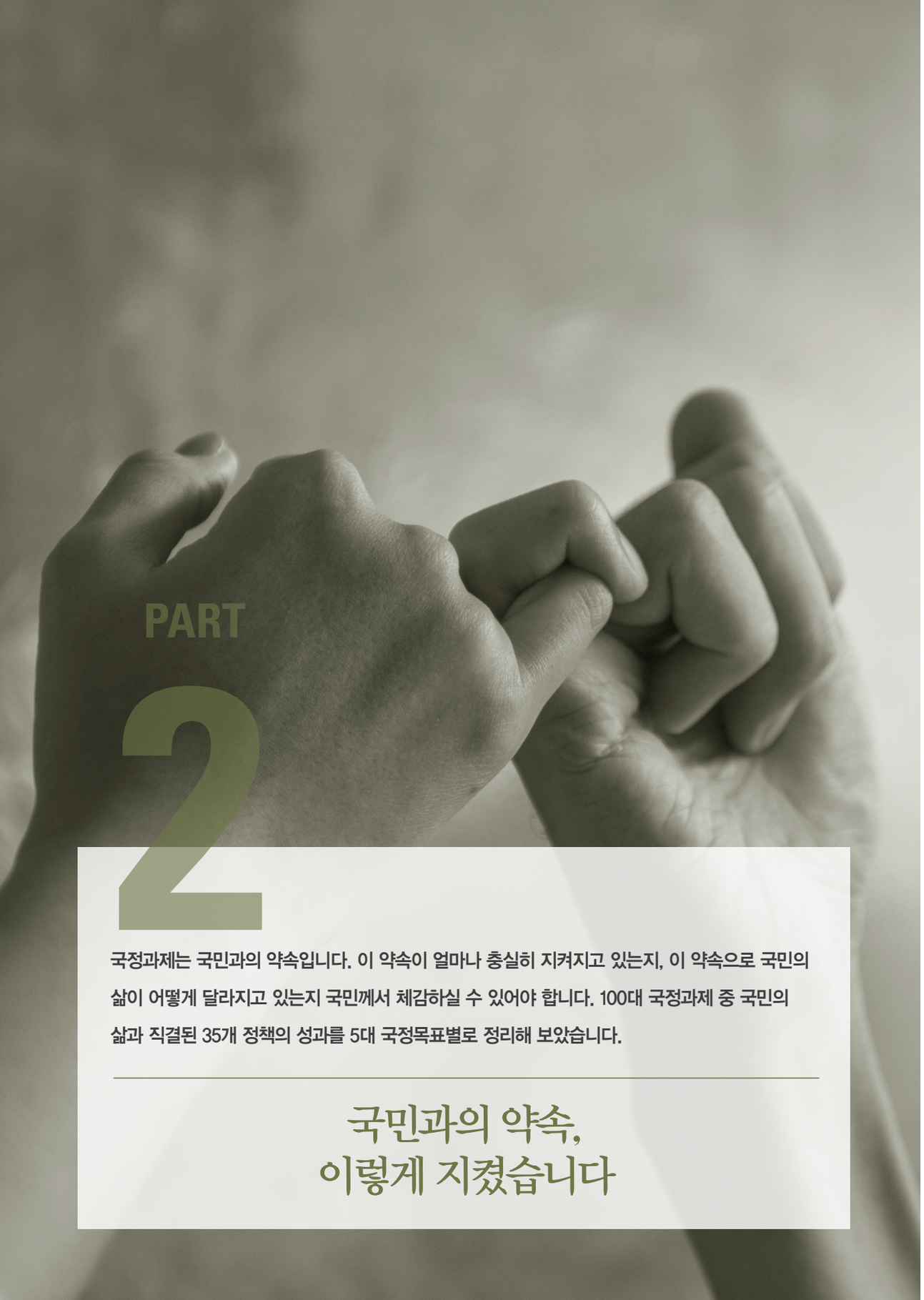
전국의 혁신도시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뉴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부터 68곳의 시범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을 연계한 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명시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은 문재인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여러 정책이 아직 입안 단계이나,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내딛었던 국가균형발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상생발전의 기본 틀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로드맵 (안)

비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핵심 전략	❶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❷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❹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❺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구축
추진 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PART

2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이 약속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성과를 5대 국정목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약속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정상회담 개최
2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및 외교지평 확대
3 베를린 구상, 우리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환경 구축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
5 책임국방을 위한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국민이 주인인 정부

6 철저한 적폐청산, 잘못된 제도와 관행 혁신
7 국민주권시대의 실현
8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 구축
9 국가를 위한 희생, 합당한 예우
10 피해자 치유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1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2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13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마련
14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
15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16 돌봄 · 보육 국가책임 강화
17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8 노동시간 단축 등 휴식과 문화가 있는 삶
19 양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및 건강한 가족 지원
20 국민생활 안전관리 강화
21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더불어 잘사는 경제

22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 증가, 공공서비스 질도 향상
23 청년 체감형 일자리 대책
24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16.4% 인상
25 서민체감형 종합적 금융 지원
26 중소 · 벤처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27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추진
28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전망 강화
29 공공도, 민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0 갑의 횡포 없는 공정경제 구현
31 과감한 규제혁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32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강력한 지방분권
33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
34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농어가 소득 안정
35 균형성장 거점육성과 도시재생뉴딜 추진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정상회담** 개최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합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2년 가까이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이 2018년 1월 복원되었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습니다. 이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특사파견, 대북 특사단 방북, 남북 정상간 핫라인 개통 등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4월 27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등에 합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
- 양 정상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민족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 고위급회담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 수립





-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
- 6·15 등 민족공동행사,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고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 합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전환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어로활동 보장
-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의 활성화에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고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여는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확인
-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
-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

양 정상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남북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며, 올해 가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남북정상회담 최초로 남북정상 내외가 공식만찬에 참석하여 화합과 신뢰를 제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남북협력을 북한에 제의
-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사 표명
- 2018년 1월 3일 23개월 만에 판문점 등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 **'평화' 최우선 추구**
  평화는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
- **'상호 존중'의 정신**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추구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지향

-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적 긴장 완화, 향후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 분야 회담 개최 및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
-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12년만의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동계패럴림픽 성화 공동 봉송 등 평화의 메시지 전달
- 2018년 2월 김여정 특사를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 및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
- 2018년 3월 5일 우리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2018년 4월 20일 남북 정상간 직통 전화 연결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문점 선언 발효
-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북한과 협의
-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긴밀하게 협력
-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
- 관련국들에 대한 결과 공유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
-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및 외교지평 확대

정부 출범 직후 4국 정상간 소통 채널 조기 구축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긴밀한 공조로 북의 태도 변화 유도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국정공백으로 방치되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0일만에 미국을 방문하고 G20을 계기로 미·중·일·러 4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외교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을,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정상간 소통 채널을 조기 구축했습니다

- 2017년 5월 대통령 특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소통의 기반 마련
- 2017년 6월 출범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를 확보
-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간 신뢰회복 및 소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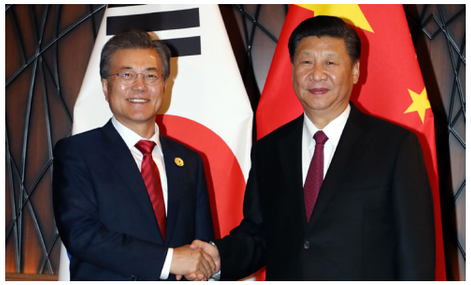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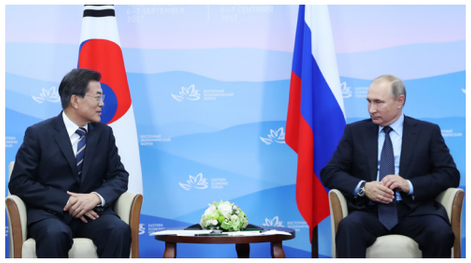
- 한·미간 정상회담(3회) 및 정상간 통화(13회)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한편, 북한에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남북/북미간 정상회담 성사 유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과정에서 중·일·러의 건설적 역할 지속 당부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핵문제 관련 공감대 형성

국방·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미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등 연합방위태세·자체방위력 강화 및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보다 호혜적인 무역증진 기반 마련
- (중국)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 정상화 및 실질협력 강화·발전에 공감대 형성
- (일본) 역사 문제는 진실과 정의 원칙하에 다루어 나가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투트랙' 기조 하에 양국 관계 발전 노력
- (러시아) 가스·철도 등 '9개 다리'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실질협력 강화 등 한·러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회담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신남방정책' 발표
- 2018년 3월 베트남을 국빈방문하여 신남방협력의 미래 청사진 제시 등 신남방정책 이행 본격 가동
  * 2020년 까지 교역액 1천억불 달성 액션플랜, 교통·인프라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MOU체결
- 2017년 8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중앙아시아 5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과의 양·다자협력 강화

베를린 구상, 우리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환경 구축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 발표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의 비전 제시, 국제사회 지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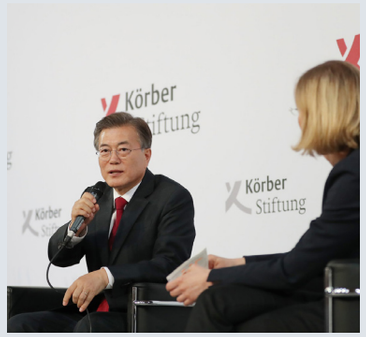
북핵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를 흔드는 중대한 안보위협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그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에서도 대북 제재·압박 노력과 함께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으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를 이끌어냈으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 자리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베를린구상' 발표
- 북한의 붕괴/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남북 합의의 법제화와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지속 등 5대 기조

베를린구상 발표 ('1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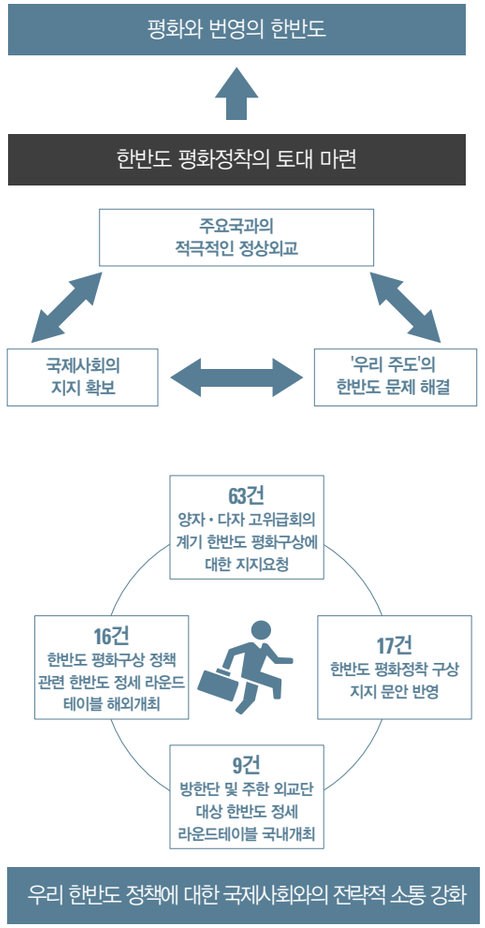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 한반도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에 기여
-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 정상외교를 계기로 미·중·일·러 등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베를린 구상'을 포함한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국제사회 주요 양·다자 고위급회의 결과 문서에 '베를린구상'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문안 17건 반영 및 해외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구상 정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16차례 개최



2018 평창동계 올림픽 · 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

평화·문화·경제·ICT·안전 올림픽 실현

남북이 화합, 한반도 평화 정착 기회 마련

선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평화·문화·경제·ICT·안전 올림픽 실현' 이라는 당초 목표를 이뤘으며, 대회 경기장·선수촌·미디어센터 등 관련시설들은 최상의 경기환경을 제공해 참가 선수단과 미디어의 호평 속에 각종 기록 경신에 기여하였습니다. 남북한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북한 응원단 참가 등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올림픽을 실현해, 향후 남북 교류·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뛰어난 대회시설과 운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 동계올림픽 92개국 선수 2,920명, 패럴림픽 49개국 선수 567명으로 사상 최다국의 최다 선수가 참여했으며 높은 흥행 성적 기록
- 시설과 환경, 대회 운영 방식에 있어 IOC·IPC, 선수·임원, 내외신 등의 호평

북한 참가 및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평화 올림픽을 실현했습니다.

- 12년만의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공동관람 및 응원 등 남북교류 활발
- 남북 정상회담('18.4.27) 등 한반도 평화의 초석

자원봉사, 참여, 공감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올림픽을 이뤘습니다.

-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한류 콘텐츠 등 현대문화가 어울린 독창적 개·폐회식 개최
- 올림픽 기간 중 축제·전시·문화공연 등 총 1,200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83만여 명이 관람

04

올림픽 붐 조성, 관광한국 홍보, 흑자 달성 등 경제 올림픽을 실현했습니다.

- 올림픽 입장권 목표(106.8만매) 대비 100.97%(107.9만매) 판매, 입장권 수입 1,500억원 돌파
- 국내 82개 기업으로부터 약 1조1천억원의 후원을 받아 목표 대비 118% 달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ICT올림픽, 철저한 보안·안전관리로 안전올림픽을 이뤘습니다.

- 세계최초 5G,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로 활용
- 범정부 차원의 보안·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올림픽 달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18.2.9 ~ 25 (17일간)		
경기장	설상 7개(평창), 빙상 5개(강릉)		
경기 종목	7경기, 15종목, 102세부종목		
경기 규모	92개국 2,920명	88개국 2,858명	82개국 2,633명
	2018 평창	2014 소치	2010 밴쿠버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 기간	'18.3.9 ~18 (10일간)		
경기장	설상 2개(평창), 빙상 2개(강릉)		
경기 종목	6경기, 6종목, 80세부종목		
경기 규모	49개국 567명	45개국 541명	44개국 502명
	2018 평창	2014 소치	2010 밴쿠버

책임국방을 위한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병사 봉급 인상 등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정보·과학기술 발전, 급격한 인구감소 등에 따라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서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전 ·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 재설계,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혁신 등을 통해 국방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민간인력을 활용한 정예화된 군구조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작전개념과 지휘구조 개편방향 정립
-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를 정예화된 군 구조로 바꾸기 위해 상비 병력 감축안 마련
-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부대구조와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력구조로 개편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구현

군 구조	상비병력의 양적 규모에 치중 **첨단기술과 민간인력 적극 활용, 軍정예화**
국방 운영	국방 특수성 강조, 폐쇄성 유지 **국방운영 효율성 · 개방성 제고**
병영 문화	장병의 기본권 제한 관행, 인권 경시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 · 복지 구현**
방위 사업	방산 비리 각인, 절차 중심 사업 관리 **비리근절, 실효적 전력 증강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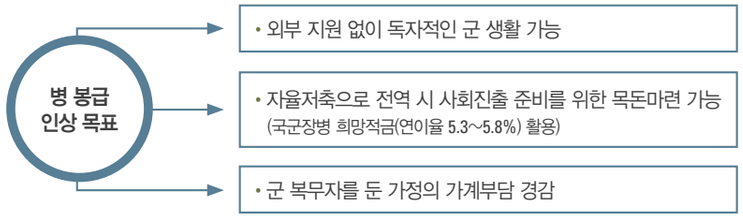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국방인력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방사청 문민화율 70% 달성, 민간인의 국방부 실·국장 보임 등 국방 문민화 지속 추진
- 2018년 4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추진(육군 기준)
- 여군 비중확대('22년까지 8.8%),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준장 3명 동시 배출

장병 복지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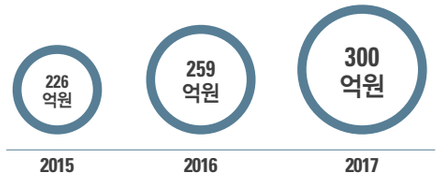
- 2018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전년 대비 88% 인상하고, 2022년까지 67만원 수준('17년 최저임금의 50%)으로 단계적 인상
- 여윳돈을 이용한 목돈마련(전역시 최대 800만원)이 가능하도록 '국군장병 희망적금' 적립한도를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추진
- 군 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원격강좌 개설대학 확대 ('16년 134개 → '17년 141개)
- 병 기본급식비 1일 재료비 인상('17년 7,481원 → '18년 7,855원), 브런치메뉴, 복수메뉴 제공 등 급식 질 개선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방산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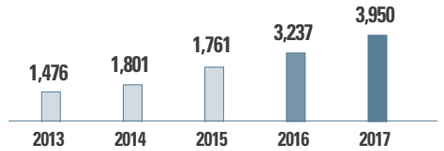
-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부과 2배 상향 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 국방 기술을 활용한 민수사업화 지원,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시행 등 기술·품질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국방기술 활용 민수품 매출액



국방벤처기업 국방분야 매출액

(단위: 억원)



철저한

적폐청산, 잘못된 제도와 관행 혁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철저한 진상규명

채용비리 특별점검,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 혁신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TF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속 적폐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국정농단 및 적폐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은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특별검사의 수사 마무리 후 공소유지 중
-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 확립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 2017년 5월 정부 교육분야 1호 업무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 국정화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 국방사이버댓글사건 재조사 실시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강도 높은 내부개혁 추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42건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고 결과 공개 예정

잘못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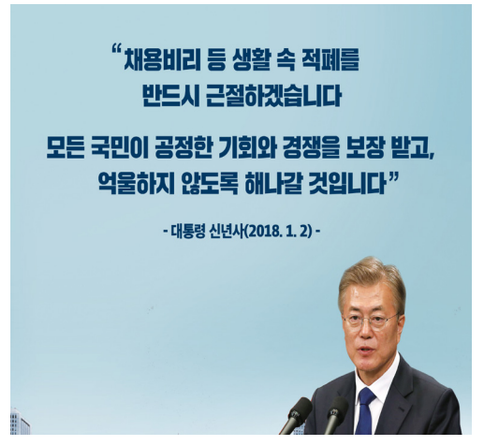
-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등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 중

06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특별점검하고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비리 적발 및 채용비리 연루자와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 등 추진
- 2017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실력위주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도입
- 금융권 채용비리 내부고발 창구 운영 등을 통한 금융적폐 청산
-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신고 포상금 도입,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운용 근절대책·공공분야 갑질 근절방안 마련





적폐청산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 적폐청산이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

적폐청산

국정농단사건 진상규명	• 비선실세 국정농단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잘못된 정책과 제도, 관행개선	• 국정역사교과서
	• 노동 2대지침
생활속 적폐 근절	• 공공기관 채용비리
	• 갑질문화

국민주권 시대의 실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은 개헌안 발의

반부패 개혁, 국민인권 보호, 언론 독립성 신장 등 국민주권 기반 마련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가 가능하도록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헌취지는 개헌과는 별도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반부패·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반부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8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43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국민께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가 가능하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국민참여본부를 설치('18.2.13)하고 주요 정당 · 헌법기관 · 유관단체 간담회, 전국 순회 간담회, 시민토론회, 심층면접형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
-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이 담긴 개헌 자문안 마련('18.3.13)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분야별 대국민 설명('18.3.20~22)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 발의('18.3.26)

그러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부패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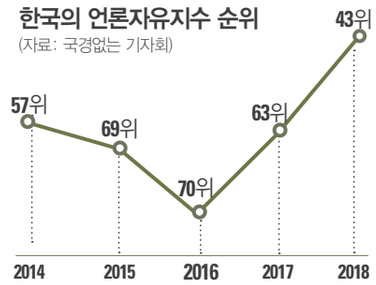
- 2017년 9월 반부패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2018년 3월 시민단체·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 2018년 4월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를 목표로 공공·민간 분야 반부패 중장기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 공익신고대상 법률 확대(279개 → 284개) 및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상향 (20억원 → 30억원)

국민인권을 우선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13세 미만의 강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을 신설('17.9월)하여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범죄피해로 인한 장기요양자 간병비와 요양치료비 상향 (간병비 1,200만원 → 1,500만원, 요양치료비 3,000만원 → 5,000만원)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스마일센터) 확대 설치 (전국 10개소 → 11개소, '17.9월)
- 국민의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홈닥터를 대폭 증원 (40명 → 60명, '17.5월)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방송미래발전 위원회를 구성('17.10월), 제작 자율성과 근로환경 개선 추진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2018년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미국 45위, 일본 67위), 2016년 70위에서 27단계 상승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겠습니다.

- 모든 공공기관 (약 690개 기관) 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하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원스톱 제공 추진 (국가안보·개인정보 데이터 제외)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 구축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로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제시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직접 국민의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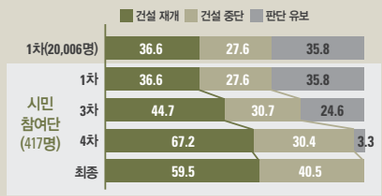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공정률이 28%에 이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2017년 6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갈등사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인수위에 '광화문 1번가'를 설치, 국민의 정책건의를 직접 접수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설하여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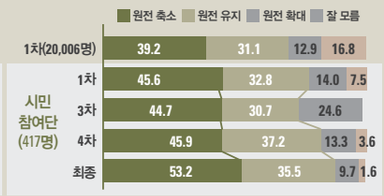
신고리 5·6호기 관련 투명한 공론화로 정책의 공정성, 중립성,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시민참여단 471명 대상 총 33일간 온오프라인 숙의과정 진행(2박3일 합숙토론 포함)
- 공론화위원회 구성시 찬성측과 반대측을 대표하는 대표단체들에 제척기회 부여 및 대표단체와의 정례적 협의 채널로서 소통협의회를 운영
-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구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론화위원회의 주 1회 정례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 브리핑 실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중단



향후 원전정책 방향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국민참여형 갈등해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전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
- 일반시민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참여형 정책결정과정'으로 에너지 분야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
-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 민주주의 본격적 추진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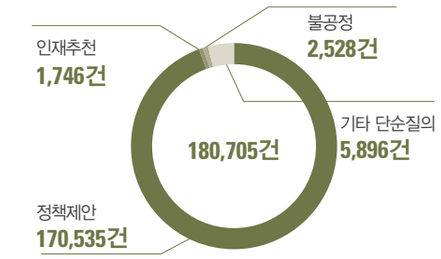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대국민 소통 창구인 '광화문1번가'를 개설, 18만 705건의 국민제안을 받아 그 중 167건의 우수제안을 100대 국정과제 선정시 반영
- 2017년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신설하여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책임있게 답변 중 ('18.4.24 현재 22건 답변)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20대가 바라본 낯선 풍경 :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견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참여의사를 밝힌 2만여 명 중 성·연령,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무작위 500명을 선정, 최종 47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달여 동안 온오프라인 회의와 합숙 종합토론회 등을 거쳤다. 시민참여단에 참가한 박모씨(29)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내 삶의 큰 자산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처음엔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까?' 생각했지만, 토론을 거듭할수록 '대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나아갔다. 박씨는 "민주적 소통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게 됐으며, 다양한 세대·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며 "이런 경험에 모두가 익숙해질 때 즈음이면 대한민국은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한 희생, 합당한 예우

보훈보상금, 무공 · 참전수당 인상
고령 유공자들을 위한 촘촘한 보훈복지 실현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체 보훈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62%를 차지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 요양 등 복지지원의 확대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보훈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보상금과 관련 수당을 인상하는 동시에 보훈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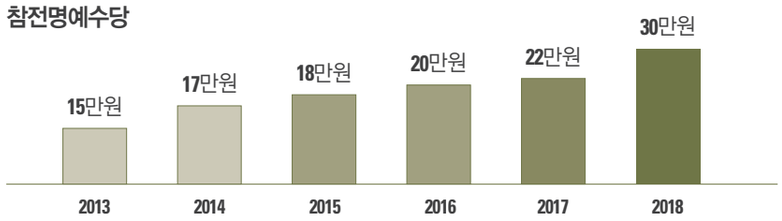
국가유공자는 인상된 보훈보상금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신설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보훈보상금 5% 인상('13 ~ '17년 평균 인상률은 3.7%)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46.8만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월 33.5만원
- 재가복지 지원대상자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인상하고 진료비는 줄였습니다.

- 무공영예수당(월 28 ~ 30만원 → 월 36 ~ 38만원) 및 참전명예수당(월 22만원 → 월 30만원) 전년 대비 8만원 인상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60%에서 90%로 확대



지역의 보훈대상자도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8월 인천보훈병원 개원으로 인천 및 경기 서부지역 보훈대상자 25만명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예정
- 지역 균형을 고려해 강원권('20년 개원), 전북권('21년 개원)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4개 지역 보훈병원의 전문재활센터 건립 확정 및 2022년까지 단계적 건립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으로 숭고한 독립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려 합니다.

-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21년 완공 목표)
- 대통령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관련 시설 보존 노력
-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원형 복원 합의('19년 복원 완료 예정), 충칭 임시정부 청사 노후 전시물 교체('18년 완료 예정)
-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



"생활지원금으로 삶이 나아졌어요."

서울 구로구의 이모씨 (82)는 독립유공자 이○○ 선생의 손녀이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집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았다. 그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지정된 1명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이씨 역시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이씨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친구들 만나기가 두렵고 집에서만 지냈다. 이제는 생활지원금으로 친구들을 만나 자장면도 사 주고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치유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제주 4·3추가신고 접수 등 피해자 중심의 접근

정부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상처 치유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바 있으나, 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이었던 한계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처리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협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기간 운영
- 학살·암매장된 희생자 유해 발굴, 유해 279구를 유전자 감식하여 신원 확인
-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2018년을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 외신기자 초청 투어, 광화문 문화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제주 4·3 국내외 홍보 추진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저는 오늘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70주년 4·3추념식 대통령 추념사 중, '18.4.3)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등 규명 계획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으로 미해결 과거사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온전한 진상규명 추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 중

"새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중략)… 새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중, '17.5.18)







위안부 합의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 설치해 결과보고서 발표
-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입장 발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신년기자회견 중, '18.1월)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미해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 추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60% 수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문재인케어')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줄여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뒤, 국민 누구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18.1월)
-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18.4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2~3분위	4~5분위
기존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개편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11

아동,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 (아동)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최대 60%에서 10%로 인하
- (여성) 난임 시술행위의 표준화 및 난임 치료 시술 비용에 건강보험 적용
- (치매환자)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 최대 60%에서 10%로 인하
-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 완화(의과, 한의, 치과, 약국)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완화

	현행	개선
1만 5천원 이하	1,500원 부담	1,500원 부담
1만 5천원 초과 ~ 2만원 이하	30%부담 (4,500원 이상)	10%부담(1,500 ~ 2,000원)
2만원 초과 ~ 2만 5천원 이하		20%부담(4,000 ~ 5,000원)
2만 5천원 초과		30%부담(7,500원 이상)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 발생시 부담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기존	개선
지원 대상	•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 중위소득 80% 이하 중심	• 모든 질환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추가 지원	없음	기준 초과하더라도 지원 필요시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치매국가 책임제 본격 시행

전체 노인인구의 10% 상회하는 72만여 치매환자 수혜 전망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 치매환자 의료요양비용 대폭 절감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환 1위로 꼽힙니다. 치매환자는 2017년 전체 노인인구의 10.2%인 72만 명에 이릅니다. 치매환자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심층상담 41.8만건, 선별검사 35만건 ('18.1 ~ 3월)



치매 의료비, 검진비, 요양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인하
  * 실수혜 중증치매환자 1만 7천명('18.3월말)
-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추진 중

치매전담형 병원·시설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 전담 치매전문병동 운영 및 확대
-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입소시설 단계적 확충

경증치매환자 24만명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 신설 ('18.1월)
  *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경증치매환자 3,400명 ('18.3월말)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치매앱 위치추적기능 강화
-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실시 ('17.10월, 동2·읍면1)
- 저소득층 독거 중증치매노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도입 ('18.9월)

"치매안심센터는 예전처럼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경기도 남양주의 김모씨(84)는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겪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할지 고민하던 중 집 근처에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는 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진단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평일이면 규칙적으로 센터에 나가 하루 3시간 가량 인지 활동, 신체 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동안 딸 이모씨는 센터 내 가족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치매환자 가족들과 경험과 정보를 나눈다.

이씨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짜증만 내셨는데 센터에 나가면서 성격이 밝아졌다"며 "가족 입장에서도 치매 진단 이후 우왕좌왕 하지 않고 가까운 센터의 프로그램에 따를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광주 북구의 정모씨(75)는 치매 악화로 얼마 전부터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가방을 잃어버리는 등의 일이 잦다. 자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고, 고령의 배우자가 홀로 그를 돌보고 있으나 힘에 부친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체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2018년 1월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돼, 정씨와 같이 신체적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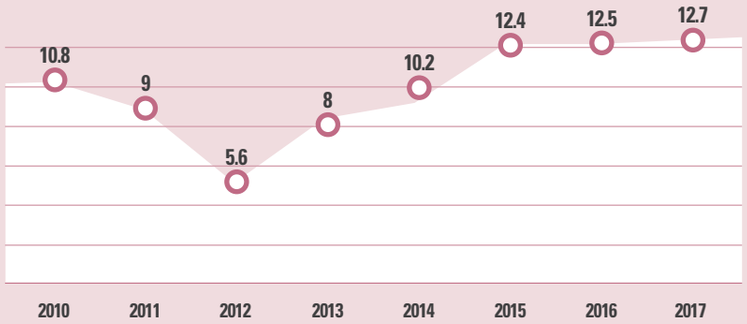
2017년 총 12.7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실현

2017년 11월 주거복지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주택의 양적부족 현상은 완화됐지만 서민층이 느끼는 주거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임차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크며, 임차인 권리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민·무주택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총 12.7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보다 많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
(단위: 만호)



청년 특화형 주거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에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20만실, 기숙사 확대 5만실 등 청년특성을 감안한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최고 연 3.3% 금리·비과세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및 월세대출 한도 확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유아돌봄센터 등이 설치된 신혼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호 및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통한 분양형 주택 7만호 공급
- 신혼부부 전용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 2배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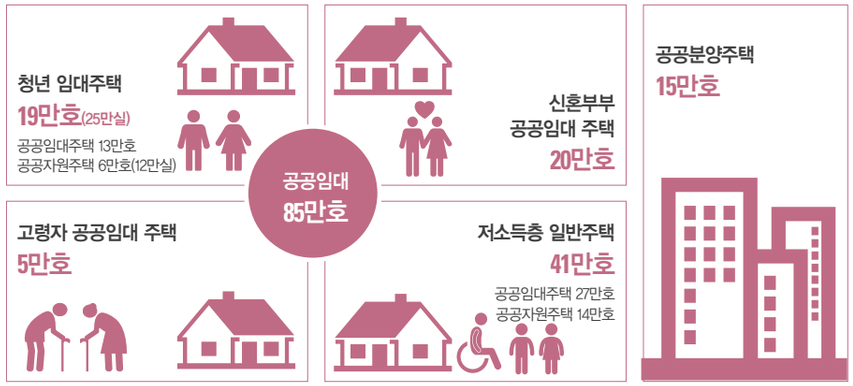
어르신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해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2년까지 공적임대 85만호, 분양 15만호 등 100만호 공급
  * 청년 19만호,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자 5만호, 저소득층 41만호, 공공분양 주택 15만호
- 긴급지원주택 도입,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공급 지원, 주거급여 월 12만원으로 확대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인근지역 임대료 하락, 교통 혼잡, 지역 슬럼화 등을 우려
-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거주환경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다각적인 상생방안 마련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비수급 빈곤층 최대 90만 명 추가 수급 혜택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이 발표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2017년 4/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복지 확충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율은 2016년 14.7%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6년 46.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르는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려면 일생에 걸쳐 소득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양쪽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7.11월) →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제 폐지('18.10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19.1월), 노인('22.1월)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돌봐 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

만0~5세의 자녀를 둔 가구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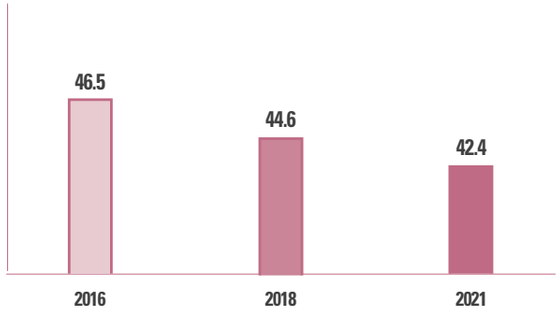
- 2018년 9월부터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의 가구 만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14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인상됩니다.

- 2018년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현행 월 20만 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 4.1%p 감소 전망

노인빈곤율(%)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일하는 대학생 및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18.1월)
-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18. 4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0만원을 3년간 총 1,500만원 가량 적립 지원하여 탈수급 기반 마련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잠재·초기 독거노인 발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18년 62만 6,000명 → '22년 90만 2,000명)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 : 은둔형 독거노인 자살예방 및 사회관계 회복 등 지원 (대상자 '18년 0.5만명 → '22년 1만명)

획일적 지원과 낙인효과를 부르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 개인별 욕구·환경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조기기·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우선 도입
  * '19.7월에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20년에 이동지원, '22년에 소득·고용지원으로 단계적 도입 추진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교통비 부담 완화, 통신요금 할인으로 국민 1,143만명 호응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로 60만명이 등록금 절반이상 수혜

가계소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기준 12.1%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설·추석 명절 때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에도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국민의 교통비를 줄였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으로 통신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교육비 부담을 줄였으며, 문화·여가 활동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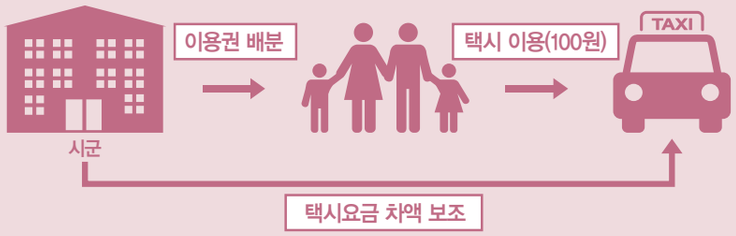
-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 면제(3천만대, 1,252억원)
- 서울외곽북부, 서울~춘천,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외곽 순환도로 '18.3.29부터 통행료 인하

승용차 기준 : 4,800원 → 3,200원 (1,600원↓)

100원 택시 등 취약지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비를 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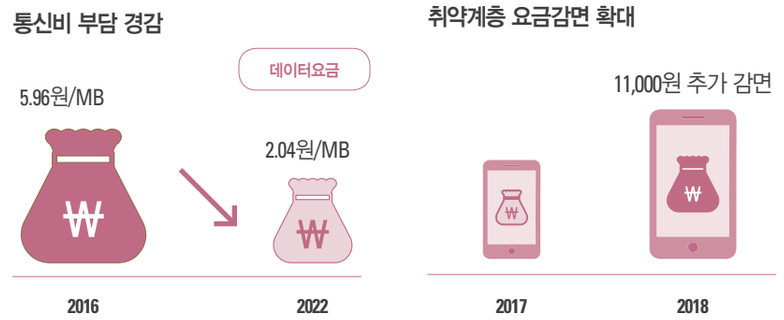
- 버스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등 지역주민 30여만명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도입
- 2017년 100개 시군 실시, 2018년 121개 시군으로 확대



15

서민과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2017년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요금할인 가입자 1,143만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통신비 11,000원 감면 (노년층은 '18년 하반기 시행)
- 저렴한 요금제 '알뜰폰' 활성화 (알뜰통신사에 약 320억원 전파사용료 감면)



저소득층과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이용가능),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에서 10%로 인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으로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대학 입학금 폐지 ('18년 국공립대, '22년 모든 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 '17년 52만명 → '18년 60만명)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확대 (돌봄대상 '18년 33만명 → '22년 53만명)
- 교육급여 확대 ('17년 초등학생 4.1만원, 중·고등학생 9.5만원 → '18년 초등학생 11.6만원, 중·고등학생 16.2만원)

문화·여가 활동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연간 지원액 인상 ('17년 6만원 → '18년 7만원)
- 근로자 휴가지원 ('18.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여행경비 지원)

외식비 등 물가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물가 체감도 높은 외식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감시 강화
- 농수산물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안정대책 추진 (체감물가 1%대로 유지)

돌봄·보육 국가책임 강화

초등 온종일 돌봄 확대로 2022년까지 돌봄 수요 53만명 충족 전망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373곳 새로 설치, 매년 450개소 추가설치 예정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출산율 저하는 물론,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출산 후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고 2022년까지 이용률을 40%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대상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에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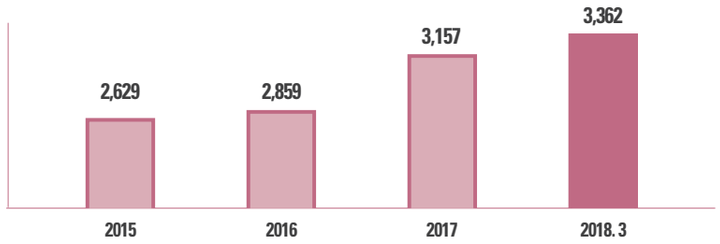
-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22년까지 학교돌봄 이용자는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마을돌봄(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이용자는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373곳을 확충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73곳을 신설하였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 설치 예정
- 공동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단가를 5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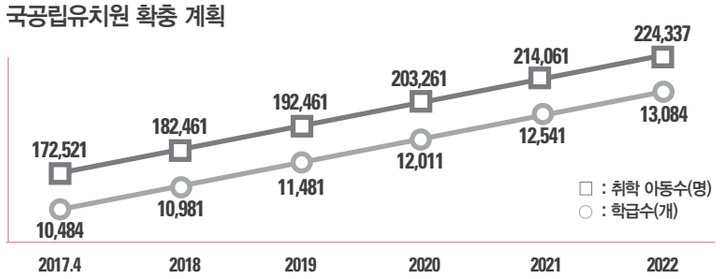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국공립유치원 취학 아동수가 약 1만명 확대됩니다.

- 올해 국공립유치원 86개를 신설하는 등 총 497개 학급을 신·증설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학급 확대 추진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저소득층 유아는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유아에게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시·도를 종전 3곳에서 전국으로 확대

"우리 아이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부산 연제구에 사는 저소득층 김 모씨의 아들(5세)은 올해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했다. 그간 김씨는 비싼 사립유치원은 보낼 엄두를 못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은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아이의 교육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는 해당 국공립유치원 정원 내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김씨는 걱정을 한층 덜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보육대란 우려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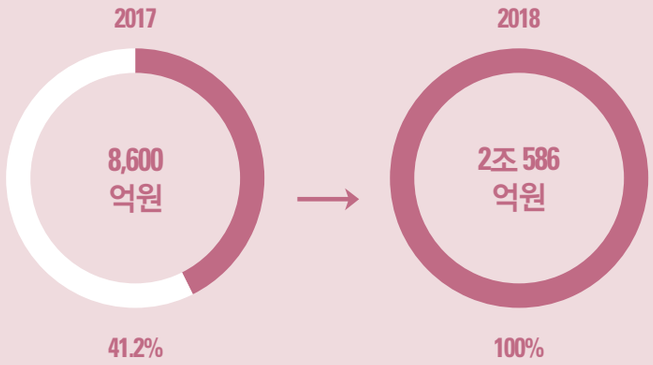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예정

유아나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의 공교육비 부담이 크고, 대학생은 학비와 주거비 걱정으로 학업에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유아에서 대학까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편성·지원
- 만 3~5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겪었던 보육대란 우려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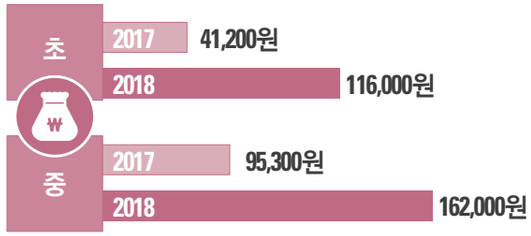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부담비중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교육급여 지원단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 금액 인상
- 초등학생 지원액은 2017년 4만 1,200원에서 2018년 11만 6,000원으로, 중고등학생 지원액은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고등학생은 학비 143만원 추가지원)으로 인상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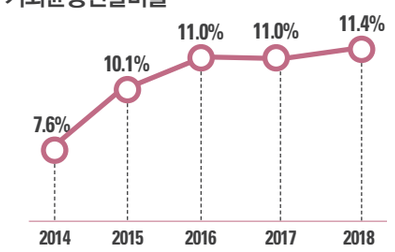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 총 7.2조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정부 4조원, 대학 3.2조원), 등록금 절반 이상 장학금 지원 학생 확대('17년 약 52만명 → '18년 약 60만명)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159만명 대출이자 약 113억원 감소 기대
- 2018년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2022학년도까지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 폐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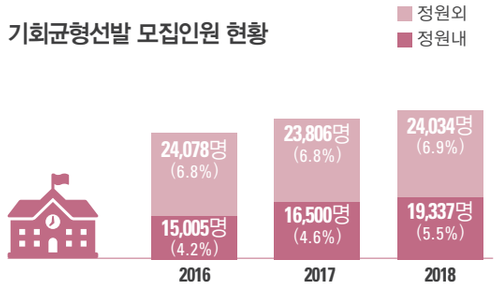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지역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과 선발비율 확대
-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 및 장학금 지원 확대

기회균형선발비율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 현황



소통과 숙의를 통해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17.8월) 이후, 열린안으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마련('18.4월)
-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 개편안 마련, 고교 체제 개편과 고교 학점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 발표 예정('18.8월)

17

노동시간 단축 등 휴식과 문화가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하고, 공휴일 보장해 노동자에 휴식이 있는 삶 보장

일·생활 균형 통해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노동 시간이 깁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 · 생활의 균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청년들은 확대된 일자리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가 7일임을 명시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 ~ 300인 미만: '20.1.1, 5 ~ 50인 미만: '21.7.1

-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대폭 축소(26 → 5개)
- 5개 특례업종 중 서면합의로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
-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300인 이상: '20.1.1, 30 ~ 300인 미만: '21.1.1, 5 ~ 30인 미만: '22.1.1

- 연소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소자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돌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
- 2017년 7월 둘째 자녀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2018년 7월 부터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당초	평일	평일 연장	휴일(주말)
68시간	40시간	12시간	16시간

변경	평일	연장 근로
52시간	40시간	12시간



26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보건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관창고업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
- 금융업 · 우편업 · 교육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미용, 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5종

-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운송서비스업 · 보건업**

문화·예술·스포츠·여행 등 여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연간 지원액 인상('17년 6만원 → '18년 7만원)
- 도서구입과 공연관람 비용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예정('18.7월)
-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스포츠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을 2017년 20개소, 2018년 7개소를 확대하여 총 63개소 운영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시('18.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여행경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액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장시간 노동 사업장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양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및 **건강한 가족** 지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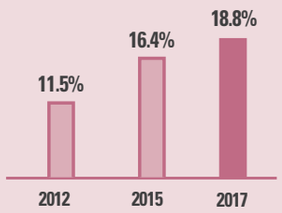
한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최근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미투 운동'을 통해 그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여성폭력 유형과 성희롱·성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한부모·비혼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혼인·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중심 문화 탓에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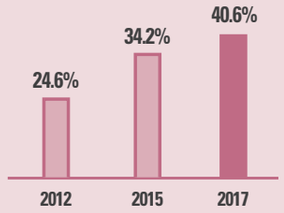
여성장관급 30% 임명, 정부위원회 여성 40% 이상 참여 등 공공이 선도하여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 초기 내각 30%를 여성 장관급으로 임명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17년 처음으로 40% 이상 달성
- 여성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처음 도입
-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시 남녀 구분 폐지 확정('17.11월)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교장·교감 비율



한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 한부모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현행 만 13세 미만·월 12만원에서, 만 14세 미만·월 13만원으로 확대
-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부여 등이 가능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불법영상물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한 긴급심의제도 활성화 추진 및 보복성 영상물 유포시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 추진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및 데이트폭력의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 추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비고
불법 영상물 신속 삭제,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반심의(10~11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2~3일) 활성화	추진중
		•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차단·삭제	법 개정 추진중
피해자 지원	• 피해자가 직접 사이트에 삭제 요청 및 삭제비용 부담	• 상담– 수사·삭제·소송지원 – 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	추진중
	• 삭제 지원 및 가해자 책임 법적근거 부재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근거마련 •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	법 개정 완료
가해자 처벌	•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의 경우 처벌 불가	•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의 경우 처벌 신설	법 개정 추진중
	• 보복성 영상물 유포시 벌금형 가능	• 보복성 영상물 유포시 무조건 징역형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 공공부문 대상 특별점검 실시, 문화·예술·체육계 등 사회 각 분야 실태조사 및 분야별 특별신고센터 운영
- 피해자에 대한 일시 긴급 보호, 무료법률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적극 적용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였습니다.

- 양육비 이행 금액이 2016년 86억원에서 2017년 142억원으로 1.5배 이상 상승
-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국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
- 성차별, 여성 비하 등 사회 인식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국민생활 **안전관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와 생활 속 화학물질 사고 예방

미세먼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을 보완하고,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를 향후 5년간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착수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관한 문제를 한 발 앞서 살피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및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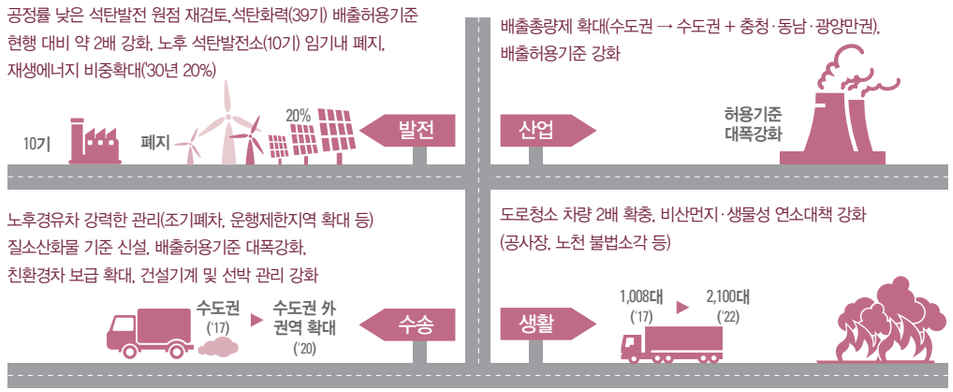
-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17.9월)
-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 조성, 피해 인정범위를 폐질환, 태아피해에서 천식 피해까지 확대 적용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위해성 평가 및 시중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 살균, 살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살생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
-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제품정보 신고 의무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 4대 핵심 배출원별 집중 관리, 미세먼지($PM_{2.5}$) 일평균(50㎍/㎥→35㎍/㎥)·연평균(25㎍/㎥→15㎍/㎥) 환경기준 강화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18.2월 현재 초등학교 662개교 시범설치)
- 한·중·일 공동협력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 추진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통해 안전안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출범('17.11월), 국민 안전(자연재난·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과 안심(민생·교육·복지·환경 등) 잠재적 불안요소 발굴·진단
- 제천·밀양 화재 등 화재 재발방지 대책, 지진 대책 등 논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 포항지진 시 수능 연기 결정,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 단축('34년 → '29년)
- 지진조기경보 최대 7초까지 단축('17년 관측 후 15 ~ 25초 → '18년 관측 후 7 ~ 25초)
- 대형화재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 마련('18.4월)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000개동, '18.7~'19.12월) 추진
-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18.4월), 낚싯배 매년 안전검사 의무화('19년) 등 추진
- 지자체와 협력, 철저한 방역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전년 동기에 비해 94.3% 감소 ('16.11 ~ '17.4월 383건 → '17.11 ~ '18.4월 22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 자살사망자('12 ~'16) 전수조사, 국가건강검진 우울증검진확대(40·66세 → 40·50·60·70세)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보행로 확충
-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밀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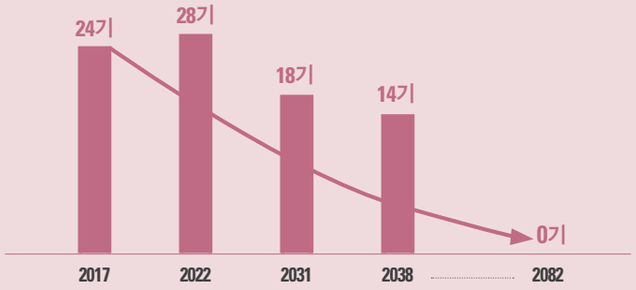
2082년까지 단계적 원전 감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노후 원전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원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 2082년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 추진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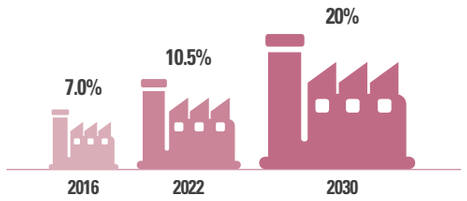
원전을 60년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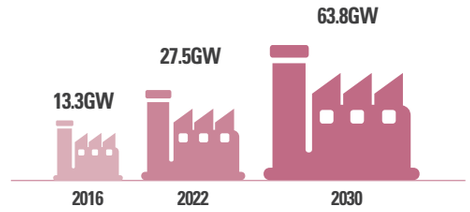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친환경화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7%에서 20%로 확대 추진
- 2017년 노후 석탄발전 3기 폐지 및 2022년까지 추가로 7기 폐지 예정
- 신규 2기, 기존 4기 등 총 6기의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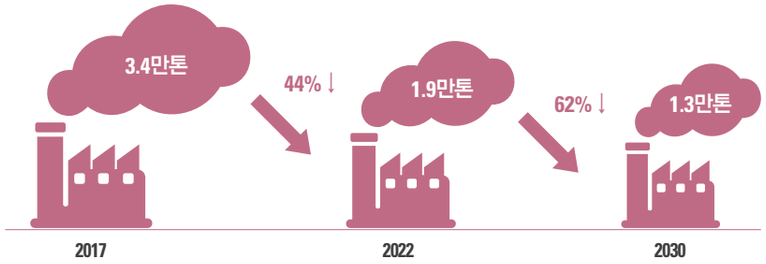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44% 감축하겠습니다.

-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조기 폐지 예정 ('17.6월 한 달간 8기 가동 중단)
-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3.4만 톤에서 2022년 1.9만 톤으로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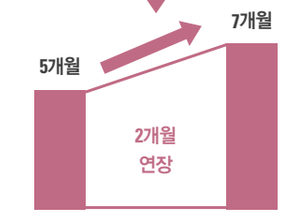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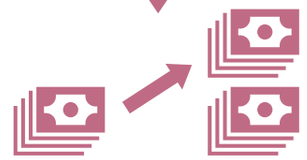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2개월 연장 및 지원금액을 7,000원 상향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중증·희귀질환자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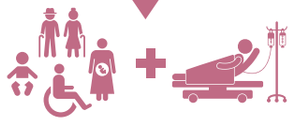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54만 가구 지원, '17년 기준)

중증·희귀질환자 (2만 가구 추가, 추정)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 증가, 공공서비스 질도 향상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계획, 민간 고용도 활성화 유도

현장 공무원 확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상승과 민간부문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에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에는 총 81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7.6%로 OECD 국가 평균인 18.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소방·교원·경찰·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81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명 충원
-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 충원('17년 추경 및 '18년 예산부터 반영)
  ⇒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17만명 추가 충원('19년 예산안부터 반영)
- **(비정규직 전환 등 30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20만명, 공기업 등 부족인력 6 ~ 8만명,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

경찰, 소방 등 인력이 부족한 현장민생공무원을 충원했습니다.

- 2022년까지 17.4만명의 현장민생공무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말까지 3만 5,000명 충원
  * 경찰 3,500명, 소방 5,400명, 교원 6,000명, 군부사관 3,600명, 사회복지 3,200명, 생활안전 등 1만 3,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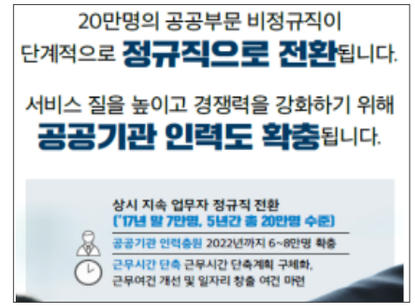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1단계) 에서 일자리 17만명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말까지 1만 8,000명 신규 증원
  * 보육 8,000명, 장애인활동보조 4,000명, 노인돌보미 등 6,000명
-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2단계) 에서 일자리 17만개 확충 계획



공공부문에서 1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 2020까지 20만 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2018년 4월 기준 10만 7,000명 전환 결정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면밀히 대처해 나갈 계획

청년 체감형
일자리 대책

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26만명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수혜 전망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금 부담 덜어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률은 2017년 기준 9.8%로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이른바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본격적 구직 활동으로 향후 3~4년간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세금감면, 주택자금 저리 대출,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 대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교통비 월 10만원 지급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가 받는 혜택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해 2,500만원 연봉(中企 대졸 초임 평균)을 받는 경우, 年1,035만원+α 수준 실질소득 증가

소득 지원 (세금 감면)	자산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합계
45만원	800만원	70만원	120만원	1,035만원+α* 수준

* α : 신규고용 지원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득 추가(최대 900만원) 증가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연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 기업에 연간 1인당 900만원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 중소 1,600만원, 중견 1,200만원, 대기업 800만원의 세액공제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청년 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소득세 100% 면제
- 기술혁신형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대한 2,000만원 까지 성공불 융자

새로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7만명+α) 및 개도국 장기봉사단 확대(2천명 → 4천명+α)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향후 3 ~ 5년간 청년 취업에 어려움 지속 전망
-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마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

"사회 초년생에게 1,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신입사원 신○○씨(28)는 취업준비생 때 처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됐다. 현재는 신입사원으로 변신, 두 달 째 열심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열심히 모아 꼭 목돈을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대기업과의 급여 차이를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 사회초년생에게 1,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은행 적금도 같이 들었는데, 쌓이는 양이 비교불가예요. 300만원 내고 1,600만원으로 돌려받는 적금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꼭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16.4% 인상**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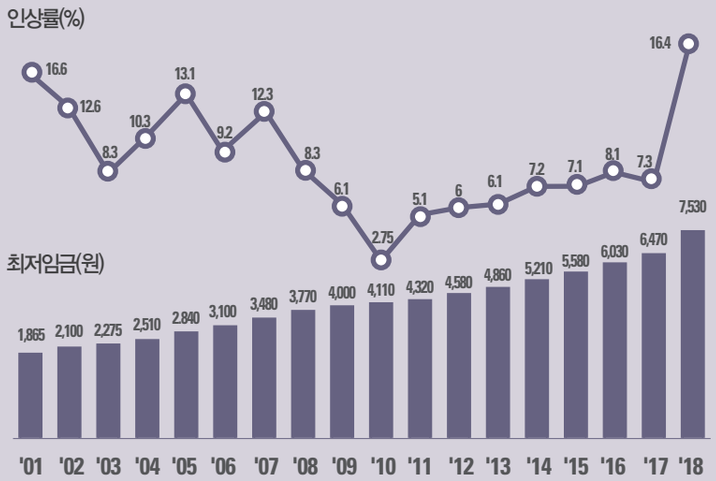
소상공인, 영세기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정부는 전체 노동자 중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기업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2018년 3월 기준 3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보다 14만 2천명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적용 됐습니다.

- 8년 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하여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의결
-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도 및 점검 실시
-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편법 사례 상담 및 신고 접수

최저임금 및 인상률('01~'18)



소상공인·영세기업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 2018년 4월 30일 기준 노동자 184만명, 사업체 54만곳이 신청
-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대비 14만 2,000명 증가('18.3월말 기준)하여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대비 10만 7,000명 증가('18.3월말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황 및 고용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서민체감형
종합적
금융 지원

서민 293만명의 이자부담
1.1조원 경감 기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 서민금융 상품 확대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금융 이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 • 취약계층에게 제도권 금융회사는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와 채무 청산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경제 성장을 위한 내수 소비 확대, 기업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민 •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은 시급합니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완화하고, 서민 대상 저리 금융상품을 대폭 늘리는 등 포용적 금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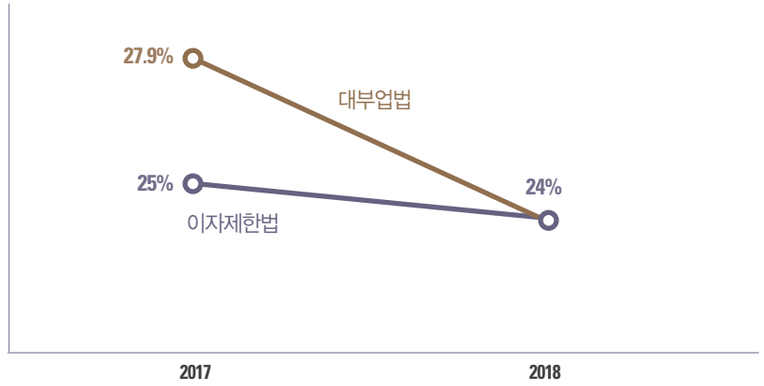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 30조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금융 연체 채무자(300만명) 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중 상환능력 없는 25만명(1.2조원) 즉시 추심중단, 연대보증인 21만명 채무면제
-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 중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일시적 채무 감면 실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상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에서 24%로 인하
  * 향후 최대 293만명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연간 최대 1.1조원 경감 기대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증가에 대비하여 범부처 합동 일제점검 실시 등 보완방안 마련

최고금리 추이



서민대출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은 은행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전면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전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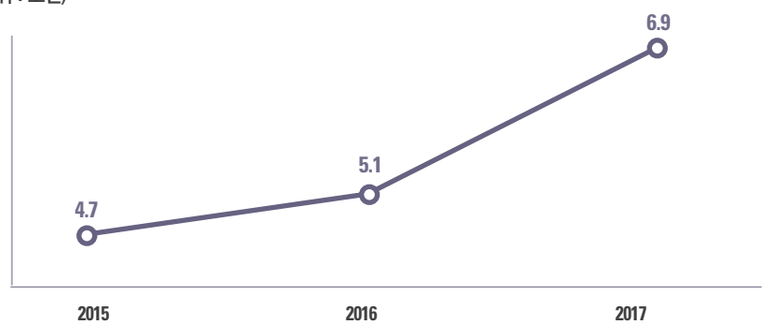
  * 수수료 면제대상자는 약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기대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했습니다.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저리 서민 금융상품의 공급규모를 5.1조원에서 6.9조원으로 확대
-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 중금리대출 공급이 2016년 약 1.3조원에서 2017년 약 3.7조원으로 약 2.8배 증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

(단위 : 조원)



중소·
벤처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 신규 벤처펀드 조성
신설법인 월1만 개 최초 돌파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창업 활력이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술혁신형 창업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벤처투자 역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역시 널리 퍼져있습니다. 정부는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투자–재도전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되살릴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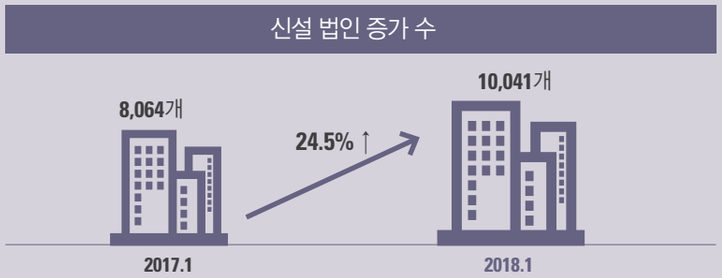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했습니다.

-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 2017년 4조 4,430억원으로 2016년 대비 28% 증가
- 신규 벤처 투자 금액도 2조 3,803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 증가
- 2018년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6,3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올해는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청년 창업 펀드 6,000억원 조성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 2조 6,000억원 조성 예정



창업이 활발해져 신설법인이 최초로 월 1만개를 넘어섰습니다.

- 2018년 1월 신설법인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한 1만41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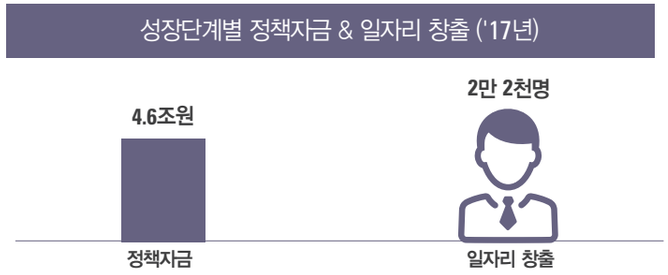


공공기관 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창업 재도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 2018년 4월부터 업력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부담금 면제 및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12개) 면제 제도 일몰 시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
- 창업–성장–재도전기의 중소기업 2만개에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4조 6,000억원을 지원하여 2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



벤처투자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기준 완화 (50억원 → 20억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17년 → '20년), 5천만원 이하 투자시 공제액 확대 (공제율 50~100% → 70~100%)

창업·벤처기업 성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업성장을 가로 막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혁신 창업을 통한 자수성가형 부자가 주요국에 비해 적은 상황
-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추진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추진

기초연구 확대 및 R&D프로세스 효율화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화 사회'로 급속히 발전 중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이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공인인증서 폐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개선, 드론산업계 애로 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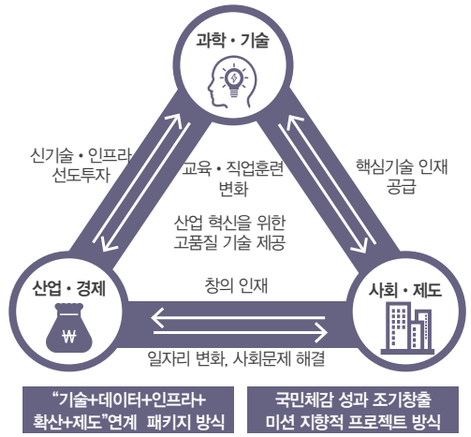
-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
-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애로요인 원스톱 지원

신기술·신사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신고만으로 허용
- 인공지능 (AI)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마련
-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기술경쟁력 강화 등 관련 산업 육성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방안 수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450여 명 양성
-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18년 3,300억원)
- 신기술·신산업 대상 융자한도 확대 (45억원 → 70억원) 및 금리 우대 (2.8% → 2.3%)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5G 시범서비스 제공
-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기회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기초연구 지원 예산 ('16년 1.1조원 → '18년 1.42조원) 확대
- 젊은 연구인력 대상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 ('17년 1,181개 과제, 300억원) 신설
- 2018년도 R&D 예산을 사상 최대인 19조 7,000억 원으로 편성

R&D 프로세스를 '평가는 엄정히, 행정부담은 가볍게' 개편하였습니다.

- 연구자 중심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방안 수립 ('17.11월)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 (17개 → 2개)하여 부처별 별도 시스템 이용 불편 해소
-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대통령)'로 통합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 R&D 예산 편성 방식을 혁신성장에 맞춰 개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전망** 강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로 연간 3,500억원 부담 감소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낮추고, 임대보증금 보호

2015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의 85.6%를 차지하며, 종사자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이나 고령화와 영세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모바일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유통산업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46만 소상공인 연간 80만원 수수료 절감
- 밴(VAN)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편의점, 슈퍼 등 10만개 소액결제업종 가맹점에 연 200 ~ 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18.7월 시행예정)
- 온라인 영세·중소가맹점도 오프라인 가맹점 수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19.1월 시행예정)

변경된 카드사 수수료 적용기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8%)

기존	변경
연매출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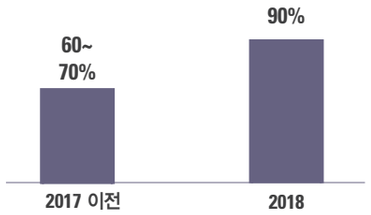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

기존	변경
연매출 2억~3억원	3억~5억원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낮춰 상가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인하
- 환산 보증금을 증액하여 전체 상가의 90% 이상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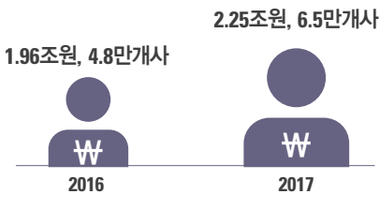
상가 임대차계약 보호범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16년 48,341개사 1조 9,550억 원 → '17년 64,497개사 2조 2,450억 원)
- 2018년 소상공인 긴급자금 (2,000억 원 규모) 대출 금리를 2.5% 저리로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52만개 사업장, 노동자 175만명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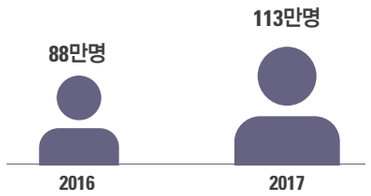
정책자금 지원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17.1월 세제개편, 최대 300만원 → 500만원)
- 노란우산공제 부금내 대출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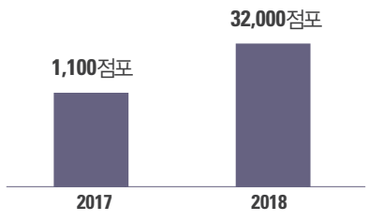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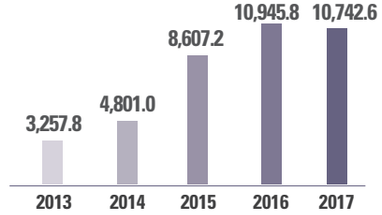
전통시장의 안전과 쇼핑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화재알림시설 확충 ('17년 1,100개 점포 → '18년 3만 2,000개 점포)
- 온누리 상품권 2년 연속 1조원 판매 달성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확대 ('17년 47개소 → '22년 245개소)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



온누리 상품권 연도별 판매액 (억원)



공공도, 민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 정규직화 결정

민간부문에서도 잇따라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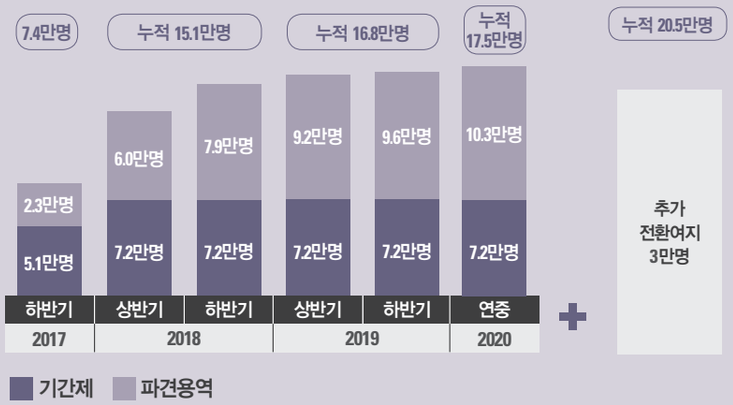
정부는 고용이 불안하고 정규직에 비해 처우수준도 낮은 비정규직의 상황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이었던 고용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4월 기준 공공부문에서부터 1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처우 개선 정책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공공부문에서 1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2018년 4월 기준 10만 7,000명 전환 결정
- 2020년까지는 20만 5,000명 전환 목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민간의 비정규직 남용방지 정책방향 발표
- 만도헬라, 생산공정 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 합의

공직 내 비정규직의 순직을 인정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순직 인정 및 관련 예우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18.3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

"매년 계약 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계약 갱신을 하면서 혹시 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년이 보장되게 되었고, 4대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했던 것이 해결된 부분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무 변경 등 처우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국ㅇㅇ회 기간제 근로자 허ㅇㅇ씨·50)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기대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장되어 근로자의 사기와 조직 일체감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ㅇㅇ공사 용역근로자 오ㅇㅇ씨·55)

갑의
횡포 없는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전속거래 강요시 엄중 처벌

노무비 등 원가 증가 시 중소기업 납품대금 인상 요구 보장

정부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방위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실시해 위반 혐의를 확인할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적극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도록 제도적·입법적 개혁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밀어내기 등 중소 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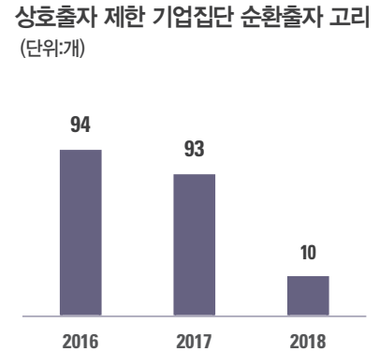
- 2017년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전수조사 실시,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친족분리 취소제 도입
- 정부는 2018년 1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2018년 4월 ○○기업의 사익편취행위 등 적발 및 고발
- 대기업집단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 부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핵심 순환출자고리가 2018년 4월 기준 10개로 급감
- 나머지 순환출자고리도 2018년 내 대부분 해소 예정

30





부담능력 차이를 감안, 과세형평성을 높였습니다.

-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40% → 4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
- 서민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77 ~ 230만원 → 85 ~ 250만원)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및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원사업자의 단순한 기술유출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중소업체는 원가상승 시 하도급대금 인상 및 가맹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중소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금 인하 요청 시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원사업자·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체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책임 부과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 인상 및 판매 수수료율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구입토록 요구하는 품목, 가맹본부의 판매물품 마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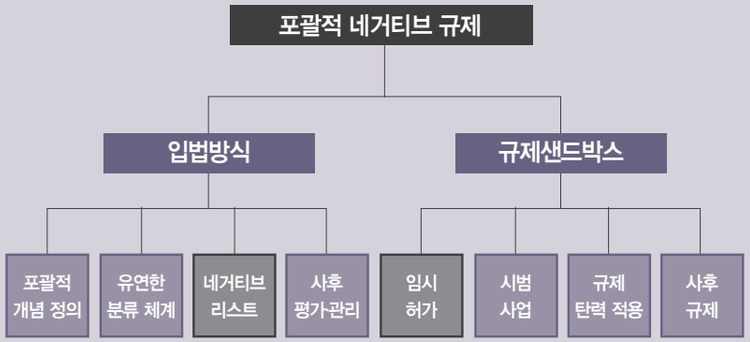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 – 사후규제」 체계 전면 도입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38건 발굴·개선, 신산업 현장 애로 89건 해소

2017년 9월 정부는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했습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이 일어나는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체계는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 속도에 대응해 신산업·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이른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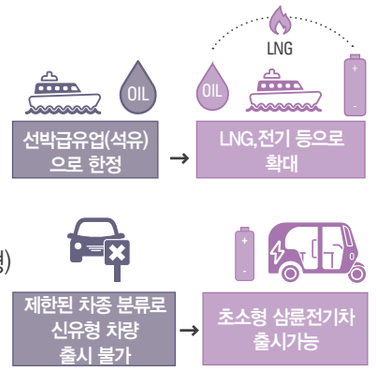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 신제품·신기술이 조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38건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입법방식을 유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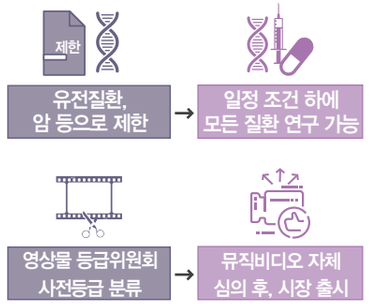
허가 대상 사업과 서비스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였습니다.

- 기존에 석유로만 한정되어 있던 선박급유업의 개념을 LNG, 전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 → 연 4.5억불 LNG 선박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
- 자동차의 구조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등), 크기 (소중대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차종 분류체계에 기타 유형을 도입하여 차종 구분을 유연화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사후·평가 관리체계 도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유전질환, 암, AIDS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을 일정 조건 준수시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
- 음악영상물의 출판시 영상물등급위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던 것을 제작·배급사의 자체심의로 가능토록 하고 영상물등급위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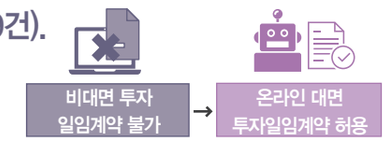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한된 환경 내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유예·면제하는 등 신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산업 규제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행정규제기본법」과 「ICT(정보통신)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4대 법률 국회 발의('18.3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거나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 하는 제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혁파해 나가고 있습니다(89건).

-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영상통화 활용 등을 전제로 온라인 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앞으로 규제가 신산업·신기술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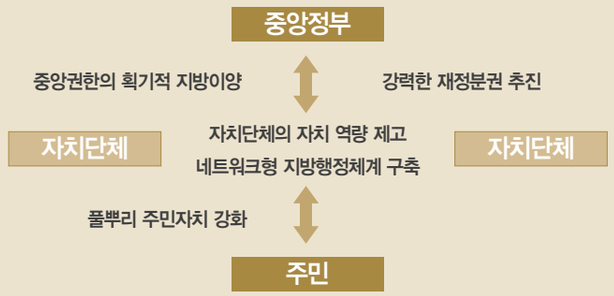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강력한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의 과감한 자치분권 추진
자치법령 제정에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분야의 분권 강화도 지방분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자치분권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국가와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 ('17.10월)
- 지방분권 핵심추진 주체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설립 ('18.3월)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로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국정운영 체계 마련
-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하여 제2국무회의 법제화 추진



32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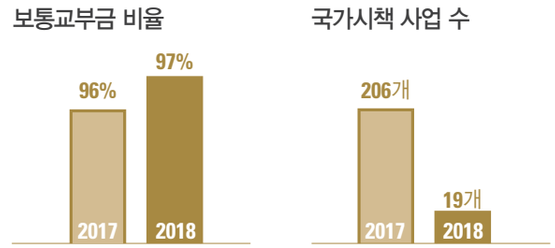
-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17.12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조례 제정·개폐 청구시스템 구축·운영 ('17.12월)
- 전자서명 활용으로 주민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자치입법 활성화
- 주민투표, 주민소환 개표를 위한 투표율 요건 완화

교육자치 강화로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비율을 96%에서 97%로 높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중 확대
- 교육청과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을 기존 206개에서 19개로 대폭 간소화
-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관련 규제적 지침 83개 폐지 추진



대통령발의 헌법 개정안에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았습니다.

- 국가운영 기본방향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 명시
-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 입법,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과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지방의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 2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의 경우 77%에 달하는 등 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고, 복지비 등 새로운 재정지출의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해소,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분권 로드맵(안)' ('17.10월)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간 구조 개선,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재정 운용에 자율과 책임 부여 등 재정분권 기본원칙 제시
- 국세와 지방세간 비중을 현재 8:2에서 7:3, 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추진
-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지역간 재정 균형 장치 마련 검토
-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국가·지방재정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재정분권TF' 구성 ('17.11월)

재정분권의 방향은?

1.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확충
2.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지방재정
3. 주민참여 및 자율통제 강화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관련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총액한도제 적용 면제
-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추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절차를 줄였습니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시·도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 해소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을 개정 ('18.3월)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범위 확대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확대 (100 → 245명)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7년 446건 접수, 제도개선 3건 포함 25건 시정조치) 등을 통한 예산낭비 근절 추진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

내 손으로 결정하는 지방재정



"우리 동네 정책은 우리 손으로!"

정책결정과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농어가 소득 안정

지역산업 위기 신속·적극 대응

수확기 쌀 가격 회복 및 농어업 자연재해 피해지원 확대

최근 해운 · 조선불황과 GM사태 등으로 군산 · 통영 등 해안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기 침체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여 국내 최대 해운 국적선사가 파산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를 설립하고, 조선업침체 · GM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사회 ·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재해대응 내실화, 농수산물 수출 촉진 등을 통해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위기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 2017년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선 연관업체, 소상공인에 자금(6,295억원)과 사업다각화 지원 (186개社, 223건)
- GM사태 · 조선업체 파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과 통영 등 산업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 1,3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18.3월)

해운산업 재건의 중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 2018년 7월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예정
- 국적선사 경영개선, 해운–조선 협력 강화 등 광범위한 해운산업 지원정책 수행
- 선박 · 터미널 투자 및 보증, 해운기업 유동성 확보 등 안정적 · 체계적 금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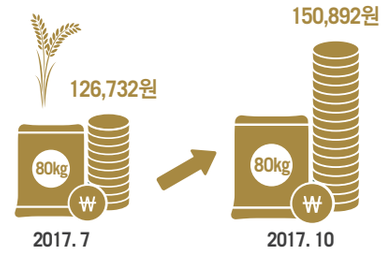


해운–조선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선박의 수주 · 발주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및 상생방안 공동연구 유도
- 해운산업의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의 건조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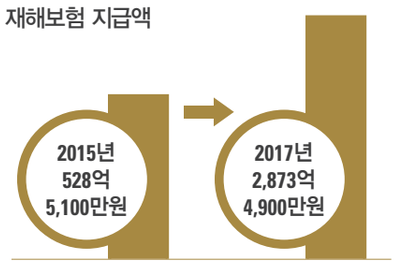
선제적인 수급안정 노력으로 쌀값을 회복했습니다.

-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수확기 쌀값 상승, 2017년 수확기에 15만원 돌파
- 2017년 9월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



농어가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 항목 확대
  * 예) 채소류 병해충방제 (30만원/ha → 168만원)
- 농작물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 강화
- 가축전염병 대응시스템 강화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전년대비 94.3% (383건 → 22건) 감소
  * 방역전담조직 신설 ('17.8월), 도축장 · 가금시설 상시 AI 검사, 가금 전업농장 CCTV 설치 및 철새 이동정보 공유 등 예찰 강화



안정적인 영농 · 어업 활동을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밭고정 · 친환경농업 · 수산직불금단가 인상 (5 ~ 20만원)
  * 밭고정 (45만원/ha → 50만원) · 친환경농업 (40 ~ 120만원/ha → 50 ~ 140만원) · 수산 (55만원/어가당 → 60만원)
- 김 종자 개량, 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 김 수출 5.1억불 달성
-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인상하여 설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 회복 (전년대비 매출 17.4% 증가)
- 도시민의 농어촌민박 부정운영 단속(718건)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개선

균형성장 거점육성과 **도시재생뉴딜 추진**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의 균형발전전략 마련

도시재생 통해 쇠퇴한 구도심 500곳의 활력을 회복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에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쇠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도시재생을 추진중입니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려 균형발전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활동 개시 ('18.3월)
-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대구), 국가대표 선수촌 개소 (진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강원), 재난피해지역 도시재생 지정 (포항),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광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18.7월 예정, 부산)

혁신도시·새만금·세종시를 新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22년 30%)
-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및 새만금개발공사 (전북) 설립 확정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확정 ('19.8월까지)
-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추진으로 개통시기 단축 ('25.12월 → '24.6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을 연계한 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

- 창업자를 위한 저렴한 업무공간, 창업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등 제공
-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견·벤처기업·대학의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인 '지역창업허브'로 개편
- 경남-항공 및 밀양-나노융합 등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2022년까지 500여곳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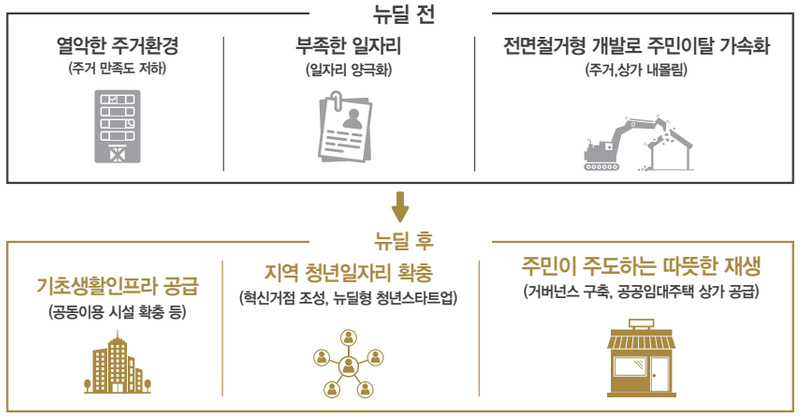
- 지역특화재생 100곳, 청년창업공간 50곳,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등 250곳 혁신거점 조성
- 68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올해 8월까지 총 100곳을 추가 선정
- 재난피해지역인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세 50% 이하의 창업육성 공간 조성
- 지역 건축가, 설비·시공 기술자로 구성된 '터 새로이 사업(노후건축물 개량사업)' 추진
- 도시재생 관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250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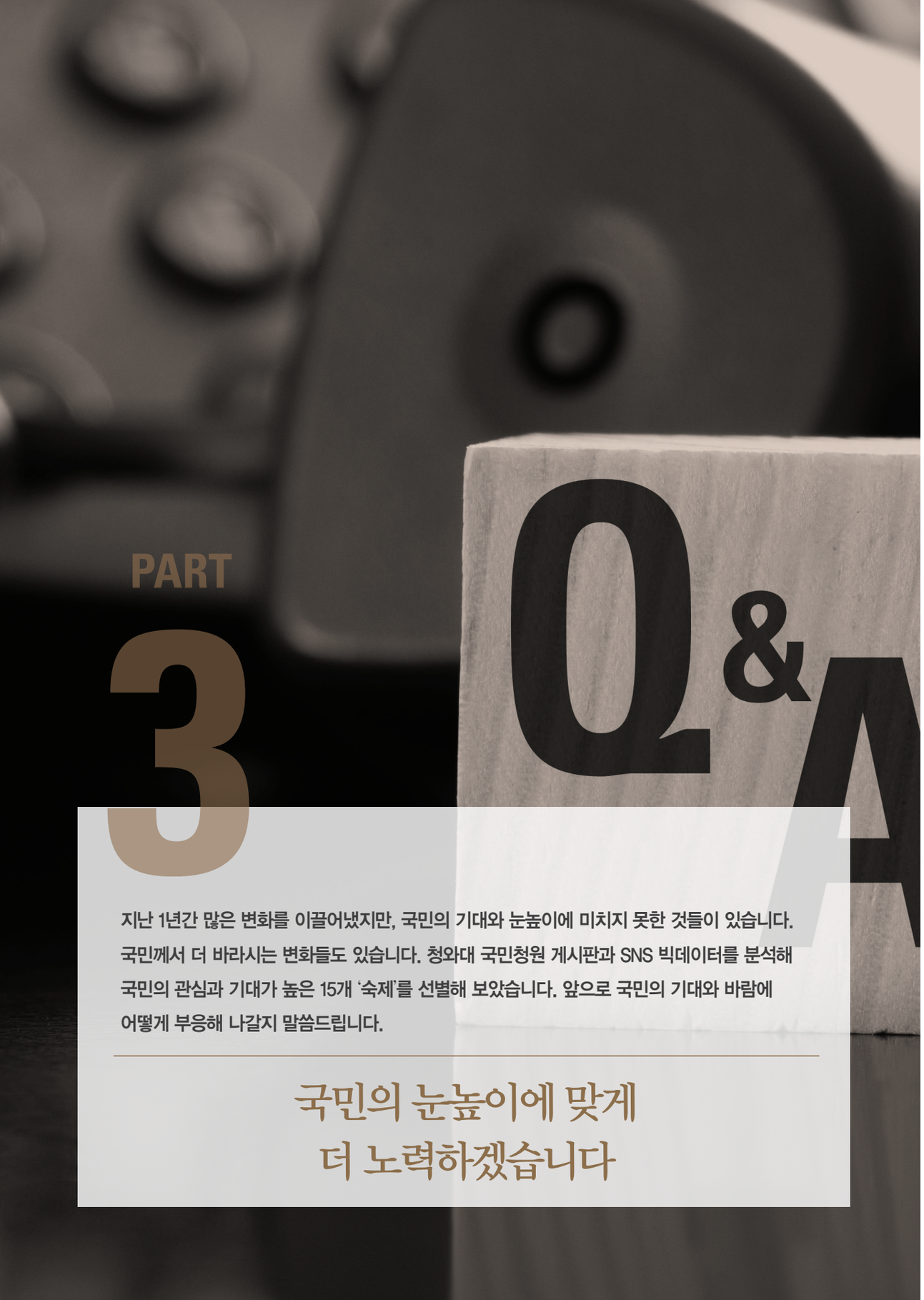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사업 발굴·추진 등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 조직 활성화
- 주민참여,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속 육성 (300곳 이상)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영세상인과 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비
- 100곳 이상에 시세 80% 이하의 공공임대상가 조성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확대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PART

3

Q&A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께서 더 바라시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숙제'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제

안전 • 환경

1 미세먼지

2 대형화재

3 산업재해

4 성범죄

육아 • 교육

5 교육정책

6 아이돌봄

7 아동수당

민생

8 통신요금

9 교통비

청년일자리

10 임금격차

11 고졸취업

경제민주화

12 가맹점보호

13 재벌개혁

건강

14 신약개발

외교

15 사드해빙

Q1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씌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아이가 실외활동을 하지 않기만 바라는 워킹맘입니다. '노약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실제로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A1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추진하고, **국내 감축은 더욱 적극적으로 (30%+α)** 검토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원뿐만 아니라 국외 영향, 기상 여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및 환경기준 강화

정부는 그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5~10%의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지역별,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 · 청소년 보호 확대

미세먼지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진단서를 미리 제출해 놓고,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만 하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질병결석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사업 추진

미세먼지의 국외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조기에 출범시켜 한·중·일 공동연구, 대기질 공동 조사 등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2

"**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연로하신 아버지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는 평범한 50대 부부입니다. 요즘 아버지께선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날이 잦고,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푼다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 · PC방을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이나 사우나 등에서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혹시나 내 가족에게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A2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건축구조와 생활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대형화재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과 제도가 이런 사회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사 화재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 하반기에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재안전기준· 제도를 안전약자 중심으로 개선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시설 위주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기준을 건물 층수나 면적이 아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특히 병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활용

화재취약대상 55만 4,000여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거쳐 화재안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넓게 활용하려 합니다. 건축물 자체의 위험요인은 물론 이용자 특성과 인근 소방력의 출동여건 등 인적·환경적 요인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국가안전정보 플랫폼을 통해 화재안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각 분야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Q3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에서 보듯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A3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5.2명 수준으로 독일 등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발주자, 원청, 하청, 노동자 등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서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발주공사에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한 노동자는 현장에서 즉시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분야 안전 집중 감독·관리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의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100대 건설사의 경우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에 대해 전국 현장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사망사고를 유발한 타워크레인의 경우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사용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며, 원청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충돌방지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해체작업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부터 다양한 성추행, 성폭행의 위험까지 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A4

"**성범죄**에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미투운동으로 확인된 권력형 성폭력 범죄 등과 같은 젠더 폭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변형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의 법·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책과 법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우월적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리기준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영리목적 유포,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확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증거수집·삭제지원·상담·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 긴급 보호, 무료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5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맏이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늦둥이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입 제도를 바꿀 때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배려했으면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A5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만들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대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어 다양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교육정책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이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유치원 방과 후 개선 방안',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순서	1. 안건 선정	2. 소통계획 수립	3. 국민의견 수렴	4. 최종 정책결정
무엇을 하나요?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을 결정합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한 국민의견을 존중하여 교육정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교육부 자체 발굴 · 국민의견 동향 발굴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부 '온-교육' 활용	· 정책관련 주요 쟁점 안내 · 주요 적용 기법 및 향후 운영 계획 안내	· 국민의견 분석 - 여론조사 - 공론조사 · 권고안 도출 - 시민정책참여단 - 규제협상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의견이 다양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입니다. 권역별 토론회, TV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6

"**돌봄**을 **확대**해 **워킹맘**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30대 워킹맘입니다. 이번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니 어떻게 돌볼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멀리 계셔 아이를 대신 돌보아줄 사람도 없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워킹맘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A6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대상 학생**을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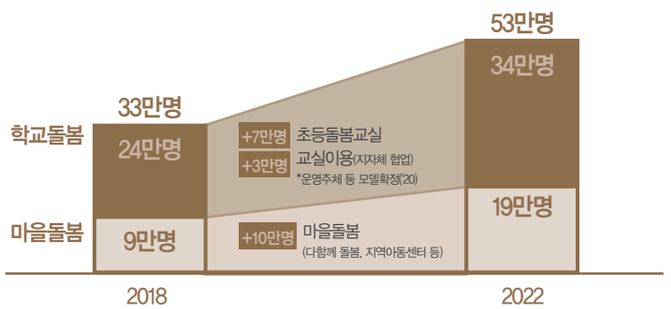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5만 명에 불과했던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가 2017년 24만 5,000명으로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은 여전히 많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현재 33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현재보다 20만 명의 초등학생이 '초등 방과후 돌봄'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가 53만명까지 확대됩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과 학교–마을의 협력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학교 안팎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학교 내 돌봄공간 3,500개실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활용해 마을돌봄 대상 학생도 늘려나가겠습니다.



Q7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 주세요.**"

2세, 4세 아이 둘을 양육하며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평일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쩌다 주말에 짬을 내서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서점에 가서 동화책이라도 사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 주세요.

A7

"**2018년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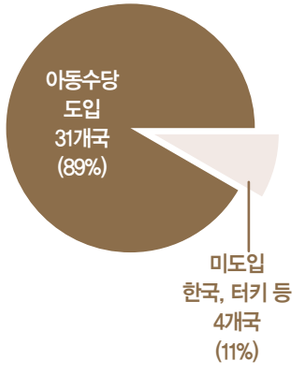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동에 대한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현금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멕시코, 터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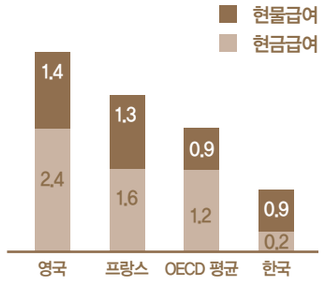
아동수당 신설 및 2018년 9월부터 지급

정부는 2018년 아동수당 관련 예산으로 약 7,000억원을 편성했으며,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총 2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년 OECD 35개국 아동수당 도입현황



OECD 국가의 아동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단위 : GDP%)



Q8

"휴대폰 사용할 곳은 많은데 **데이터 요금**이 **부담**돼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휴대폰을 통해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데이터 사용량은 늘어만 가고, 매월 나가는 통신비는 모두 합쳐 20만원이 넘어갑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요.

A8

"국민 여러분의 **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필수품에 가까워졌습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4만 4,000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이 매년 37.5%씩 급증하는 등 향후 통신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고가 이동통신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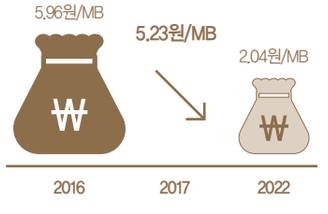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및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2017년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으며, 2017년 12월부터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11,000원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에게도 11,000원을 새로 감면해 드릴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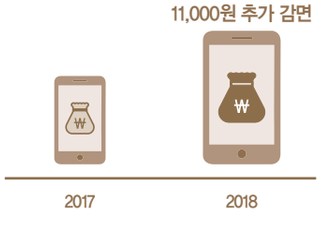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및 보편요금제 도입

앞으로 전국 버스 4,200대와 초등학교, 관광지 등 2,4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전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음성과 데이터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 인하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Q9

"교통비가 만만치 않은데
교통비 인하를
실감나게 해주세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들 하는데 교통비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중교통 비용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저처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A9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을 최대 30% 낮추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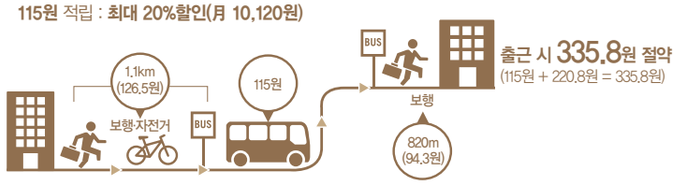
2016년도 기준 매월 교통비 지출이 전국의 4인 가구 기준 약 31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12.1%를 차지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기존의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선불형 대중교통 정기권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추가로 20%까지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발행을 거쳐, 2019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나 알뜰' 씨의 활용사례

- **정기권** 구매(1,150원 ×44회) : **10%할인(月 5,060원)**
- 출퇴근(1일 2회)시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자전거 이용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1Km당 115원** 적립 : **최대 20%할인(月 10,120원)**



'나 알뜰' 씨의 활용사례(편익)



Q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직장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커서 중소기업에 가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야근도 많고 기업 문화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인데, 청년들의 실업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A10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대기업 대졸초임이 연평균 3,800만원인데 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대졸초임 평균은 연 2,500만원으로 대기업의 6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3,000만원)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3.15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추경 확정 이후 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보조하여 2년 후 1,600만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신규 취업자 대상의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어,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존 청년재직자 대상으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5년 장기 근속한 핵심인력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한 청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5년을 근속하면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11

"**고졸 취업자**에게도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원하면 대학에도 진학해 지속적으로 자기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A11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 후학습**이 **활발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대졸인력의 초과공급이 나타나고 있고, 먼저 취업한 후에 진학을 하더라도 근무여건 상 일반 대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졸자의 선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도 진학과 해외 유학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졸자 대상 취업지원 확대

선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이 신설됩니다. 직업계고의 학생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우선 취업하고 이후 2년 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여 3년 안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합니다.

후진학자에 대한 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야간이나 주말수업 등 후진학자를 위한 전담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에 교육과정 개발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후진학자의 재직경력을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를 대학들이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후진학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을 신설하고, 후진학자를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등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18년 추경 확정 이후 시행)

Q12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종종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하는데, 공급가를 깎아주지 않아서 프로모션에 따른 부담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모션들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서 매출이 급격히 줄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로 손해를 봤는데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A12

"**가맹점주가**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은 많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으로 중소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 서민들의 안정적 생계수단이 될 수 있도록 부당한 비용전가나 피해 발생으로부터 중소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책임성 강화

정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줄일 예정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이미지 등을 훼손시켜 점주가 매출감소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 지위 강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단체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협상에 응하도록 하여,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Q13

"**경제민주화,**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을
꼭 이루어 주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유 · 지배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계열회사로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2 · 3세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다는 등 재벌의 문제점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정경쟁의 생태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13

"**재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등은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있어, 재벌개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불공정 행위는 장기간 고착된 관행으로 단시일 내 개선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재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관행이 사라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기업의 사익편취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배구조 투명화
대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해왔으며, 이제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가 93개에서 10개로 감소했으며, 나머지 고리도 올해 안에 대부분 해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개의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 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Q14

"**질병**을 **치료**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신약을 **개발**해
주세요."

70대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제 몸 같지 않고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암이나 치매가 걸려 고생하는 사람도 많네요. 약은 먹고 있는데 완전히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와 약값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관절염 치료제나 항암제와 같은 효과가 좋은 국산 신약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A14

"혁신적인 **국산 신약**을 **개발**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관절염, 치매, 각종 암 등 치료가 어려운 각종 질병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 신약 개발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상 15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국산 신약 개발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정부는 국산 신약 개발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7월 국내에서 개발된 관절염치료제가 29번째 국산 신약으로 출시됐습니다. 이 관절염치료제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무릎 골관절염환자의 치료를 위해 개발됐으며, 비록 완치는 어려우나 심한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약 수출로 경제성장 촉진
작년 12월에 정부 지원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항암제가 미국에 5,400억원 규모로 수출됐으며, 앞서 언급한 관절염치료제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해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을 향후 10년간 100개 이상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개발하는 기술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Q 15

"**중국이 사드 제재조치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더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한지 5년 된 대리입니다. 우리회사는 주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사드 제재조치 이후부터 영업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하루라도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A 15

"**한중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사드 배치 문제로 한 • 중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우리기업의 화장품 • 자동차와 같은 제품 판매가 급감하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 중 관계 개선 합의

한 · 중 양국은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하에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 중 양국은 상호교류 · 협력의 조속한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속적 노력

올해 3월 30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시, 양 위원은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의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여 국민이 한중관계 개선 · 발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정부 1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당당한 협력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1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2018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4.27)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10.4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로 수시논의,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 일지

날짜	내용
2017.07.06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2017.09.03	북한 6차 핵실험
2018.01.01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용의 표명
2018.02.09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2018.02.10	문 대통령–북한 고위급 대표단 면담, 김여정 특사,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2018.03.09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2018.04.27	2018 남북정상회담

•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북한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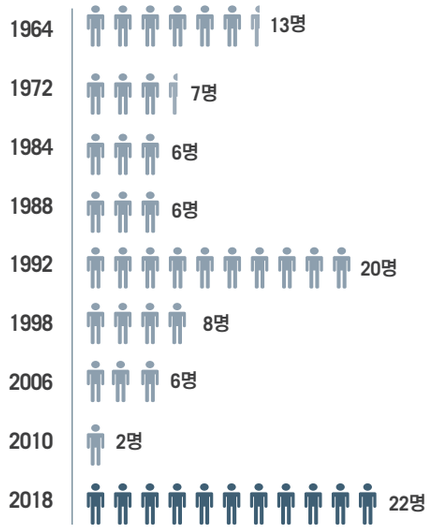


북한 참가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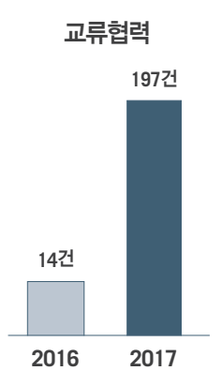
- 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최초 구성
- 동계패럴림픽 최초 참가
- 역대 동계올림픽 최대인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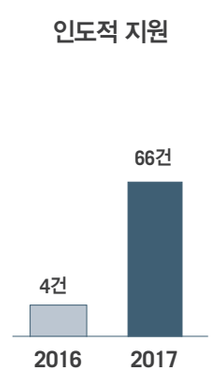


역대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 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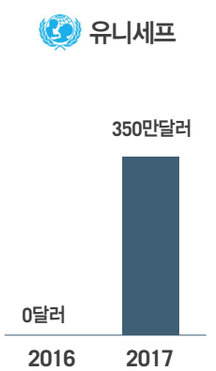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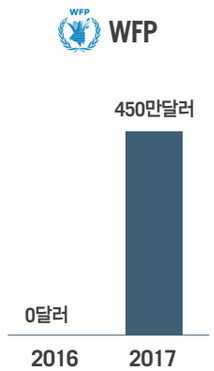
• 민간 교류협력 대북 접촉 건수





• 국제기구(유니세프, WFP)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공여





전략 2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외국 정상간 교류 (2018.4.3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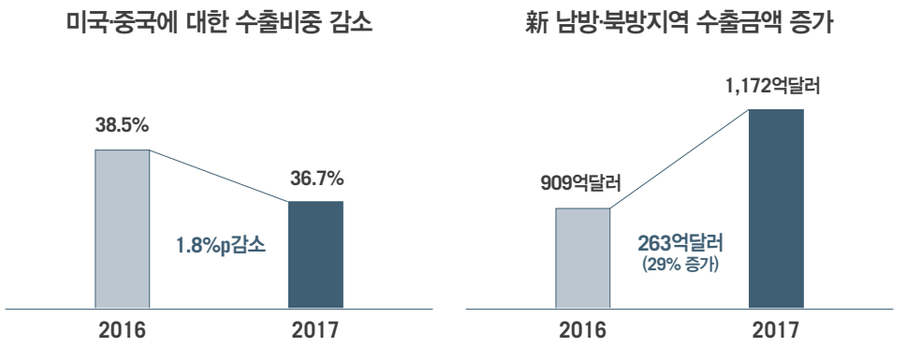


• 북방경제협력 '9개 다리' 사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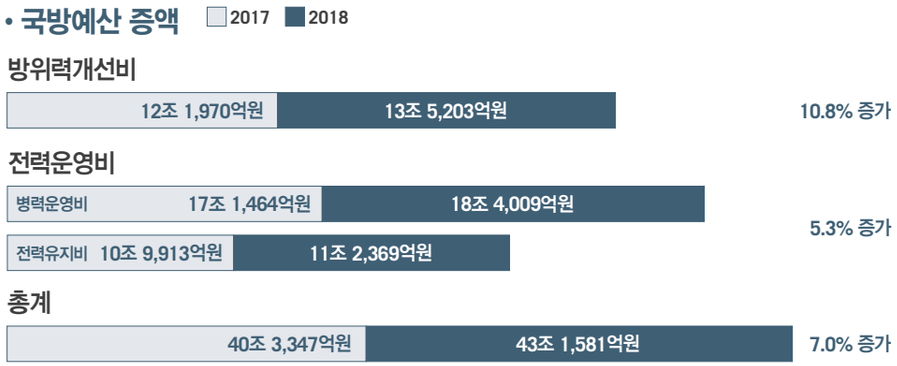
'9개 다리' 사업 전략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 사업 추진

•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완화 및 시장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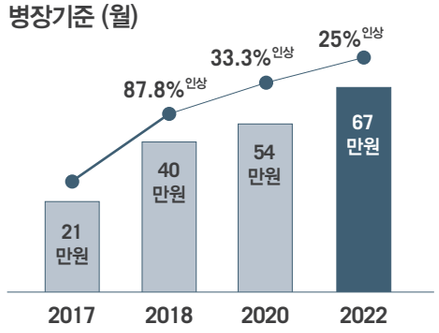


전략 3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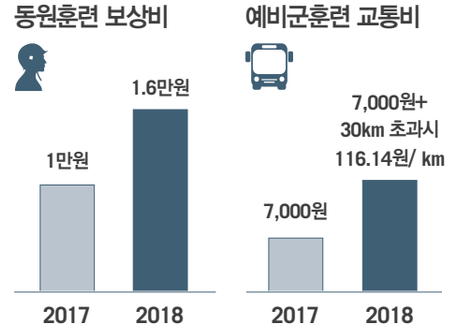
• 국방예산 증액



• 병봉급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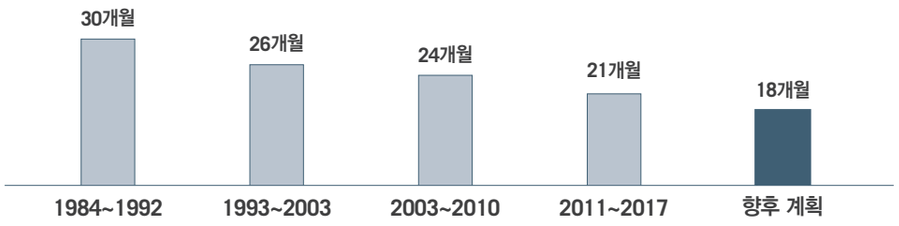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2017	2018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선택으로 민간 병원 이용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병 복무기간 단축 (육군기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주인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적폐청산

국정농단사건 진상규명	• 비선실세 국정농단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잘못된 정책과 제도, 관행개선	• 국정역사교과서
	• 노동 2대지침
생활속 적폐 근절	• 공공기관 채용비리
	• 갑질문화

•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반부패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 이행
-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 민관협력형 부패 방지 체계 확립

부패예방 법제도 정비
-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청탁금지법령 보완
- 부정환수법 제정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 신고자 보호 강화
- 보상·포상 확대
-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채용 프로세스 혁신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채용과정을 공개합니다.

채용 프로세스 혁신

채용일정인원, 채용 절차별 평가기준 등 상세정보 공개

전형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각 전형 단계별 차별없는 채용 방식 강화

전략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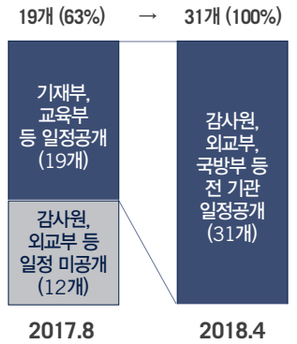
(2018.4.23 현재)

전체 청원수	16만 9,722건	2017년 8월 19일 오픈
일평균 청원	684건	
20만명 이상 지지 받은 청원	31건	0.018%
총 동의수	2,289만 9,270명	
기사 언급수 (2018.3 현재)	729번	하루 평균 24번 기사화
베스트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61만 5,774명

•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	권력구조
• 민주이념, 헌법적 가치를 전문에 추가	•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및 권한 분산, 국회 권한 강화
• 수도조항, 전관예우 방지 조항 신설	• 주민참여 확대	• 대통령 4년 연임제
• 노동의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 사법의 민주화 강화
• 검사의 영장청구권, 이중 배상금지 조항 삭제	• 농어민 지원, 소비자 보호, 기초학문 장려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다양화
		• 감사원 독립기관화

• 주요인사 일정 공개 확대



• 7대 비리 인사 고위 공직 배제



전략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정부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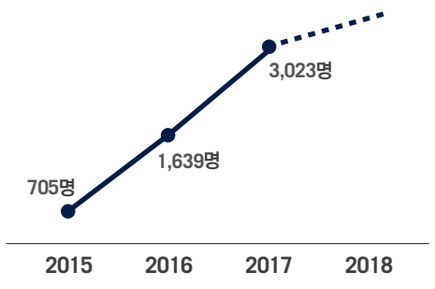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식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국민 없는 혁신 전문가 위주의 제한된 참여	**국민과 함께하는** 과제발굴–계획수립–평가 전과정 국민참여
하향식 혁신 계획수립 → 시달	**자율적·상향식 혁신** 정부혁신 해커톤(끝장토론), 기관 자율평가
행정 내부 혁신 내부시스템·프로세스 개선 집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 안전·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구축



• 국가인재 DB 국민추천제 활성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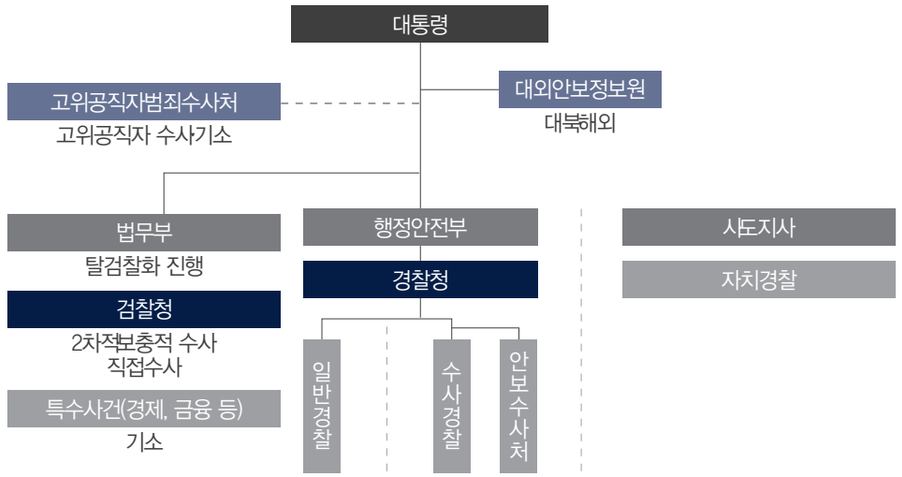
• 공직윤리 강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 → 집중 심사 → **재산 심사 강화**

퇴직자의 재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알선 → 신고 활성화 → **퇴직 후 행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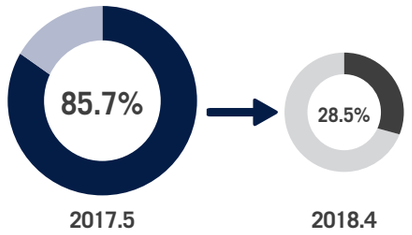
전략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3대 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구조개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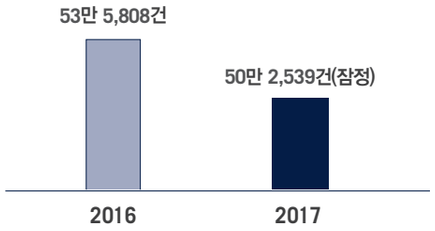


• 법무부 탈검찰화

살국본부장 중 검사보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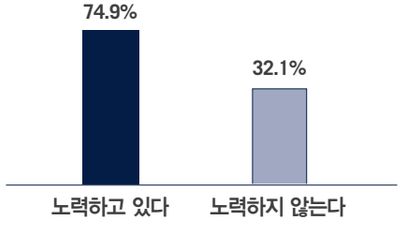
• 5대범죄 발생건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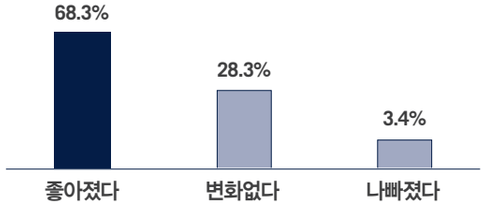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경찰 인권보호 노력 향상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



과거대비 인권 보호수준 변화



〈전국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 월드리서치('17.8.9 ~ 8.1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재인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복지 · 보육 · 교육 · 안전 · 환경 등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노동의 존중, 양성평등과 같은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략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문재인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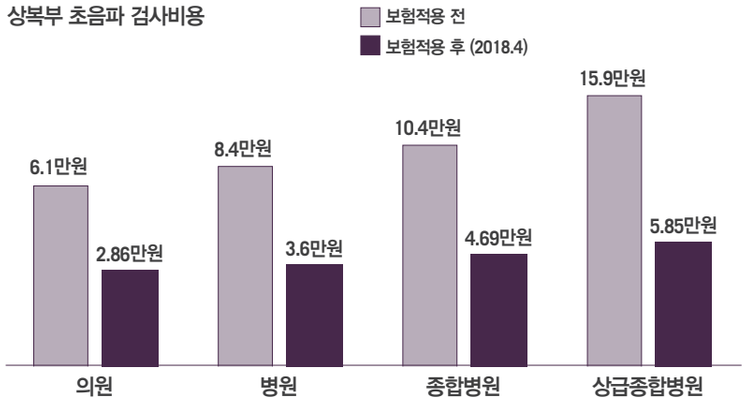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2대 비급여의 급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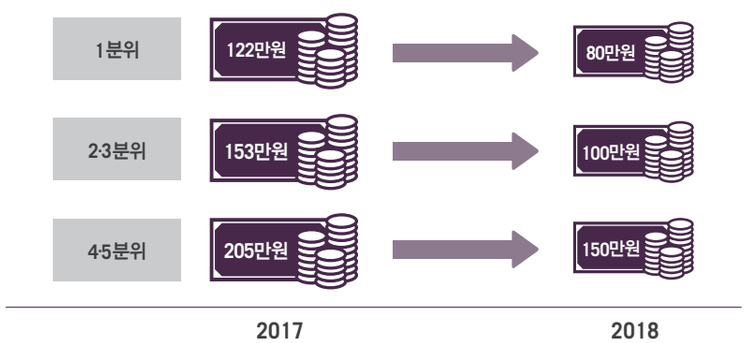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2016 33.4% → 2018 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2016 1.86만개 → 2018 2.77만개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치매국가책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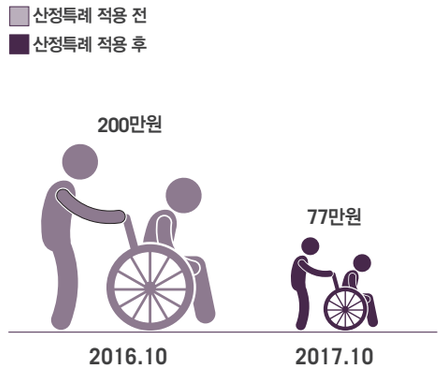
치매안심센터 설치, 원스톱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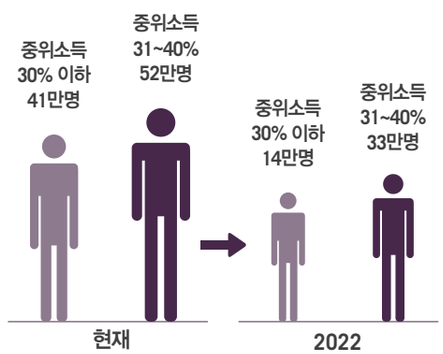
가족카페
- 가족의 휴식
- 정보교환 지원

쉼터
- 주간 단기보호
- 인지재활 프로그램

중증치매환자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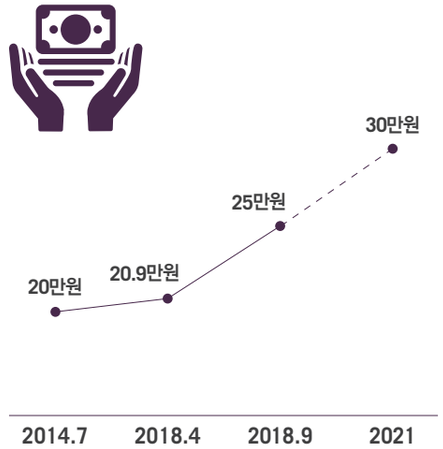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감소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19.1), 노인('22.1)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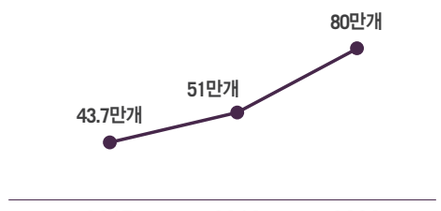


• 아동수당 신설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노인 일자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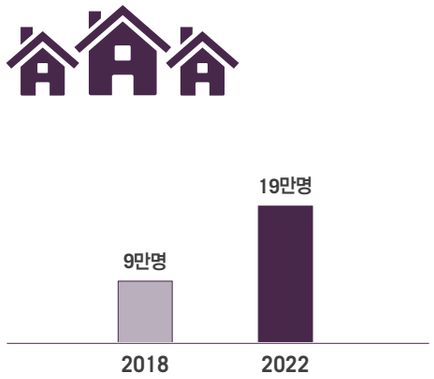


2018년 : 시장형 8.6만개(16.8%), 공익활동 37.2만개(73.0%), 재능나눔 5.2만개(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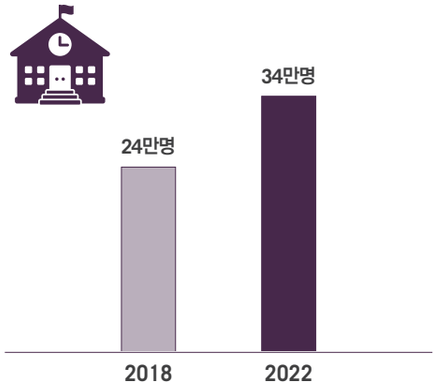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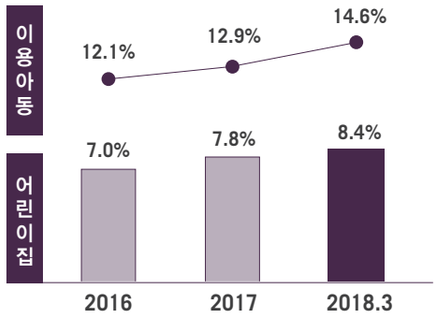
• 마을돌봄 대상 학생 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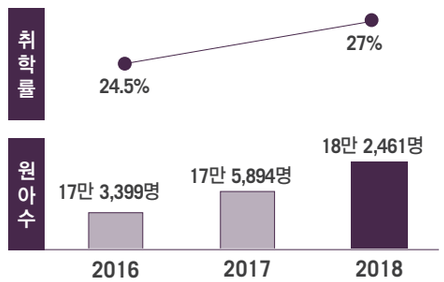
• 학교돌봄 대상 학생 수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유치원 확충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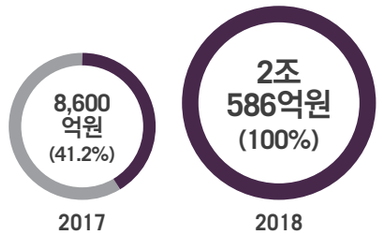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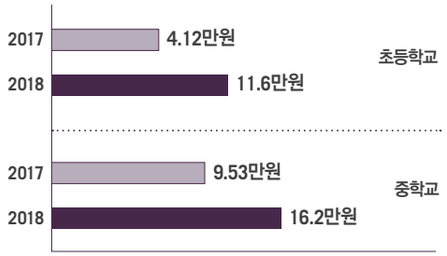
•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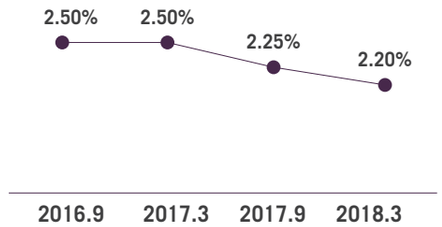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부담 비중 변화



•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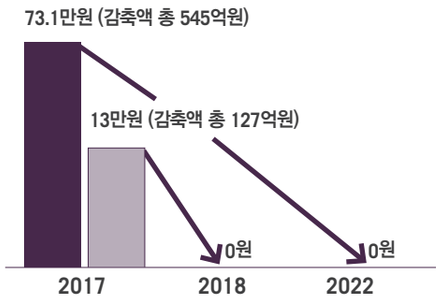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자금대출자 159만명의 대출이자 113억원 부담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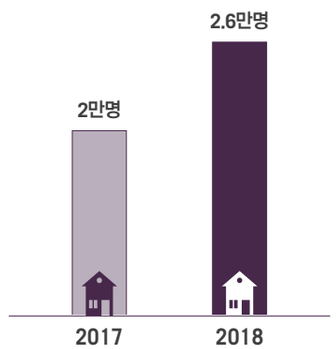
•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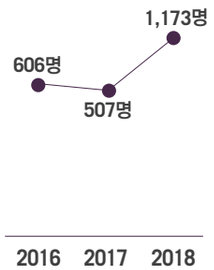
2017년 대학 및 전문대학 평균 입학금 기준

• 대학생 기숙사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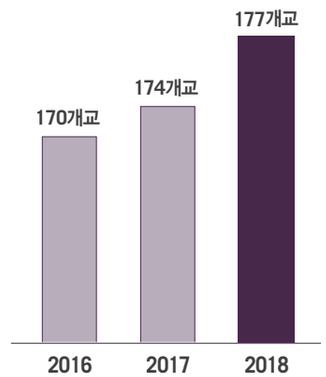
수용인원



• 특수교사 증원



• 특수학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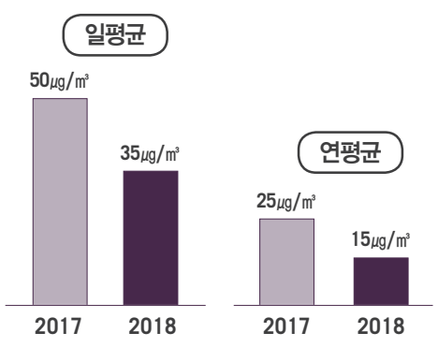


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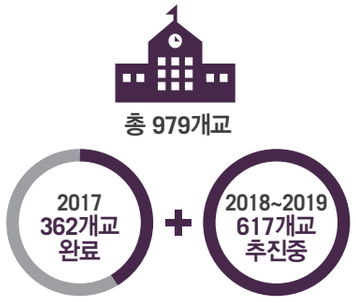
•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강화

	이전	이후
화학물질 등록	• 등록대상 3년마다 지정고시	•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살생물제 (물질·제품)	• 살생물물질 비관리 • 사전안전성 검토 없이 시장 유통	• 모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사전승인 (안전성 입증 시 유통 기능)
생활화학 제품	• 획일적 안전기준 설정 • 관리대상 한정 (가정용)	• 안전기준 주기적 재평가 • 관리대상 확대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사후관리	• 처벌규정 불완전 • 일회성 단속	• 법률 위반 시 제재 강화 (과징금 등) • 체계적·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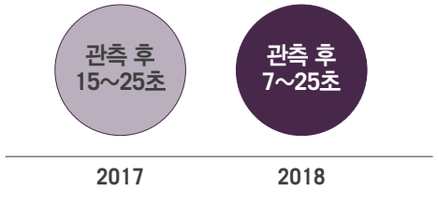
• 미세먼지 대비 학교 체육시설 확충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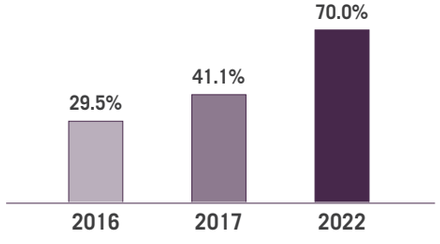
• 지진 경보 시간 단축

지진조기경보 전달시간을
최대 7초까지 앞당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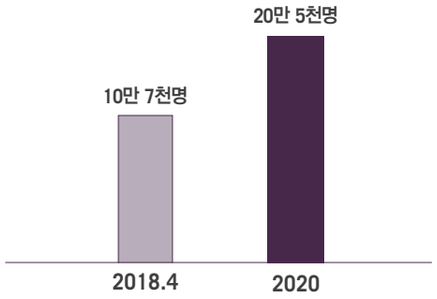
전략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근로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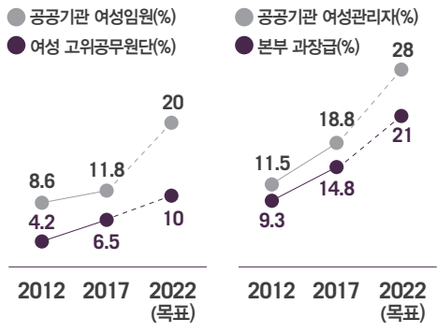
「근로기준법」 개정 (2018.2)
주 최대 68시간 ▶ 주 최대 5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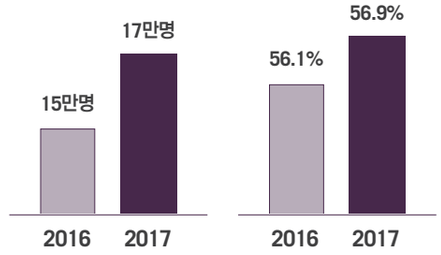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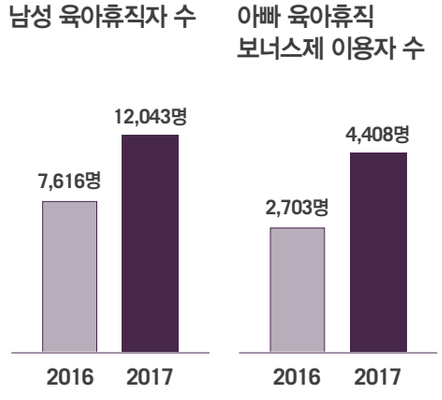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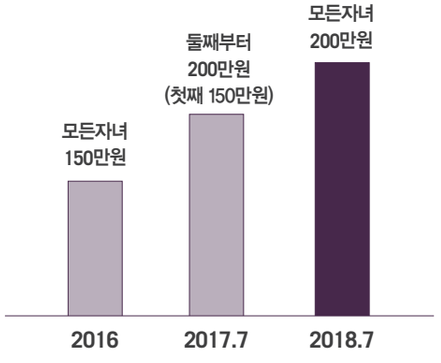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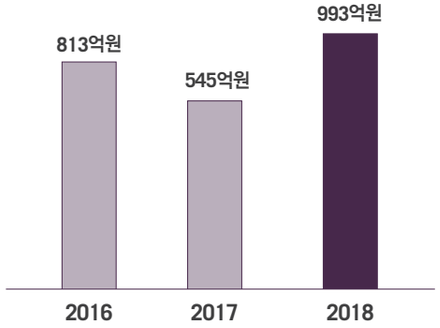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지원확대



전략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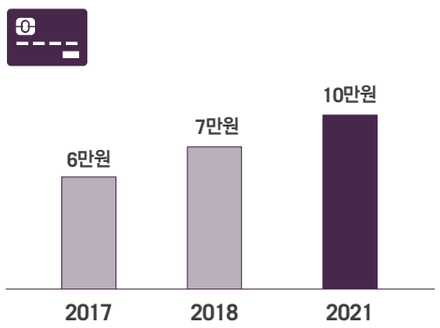
• 문예기금 재원 확충

문예기금 적립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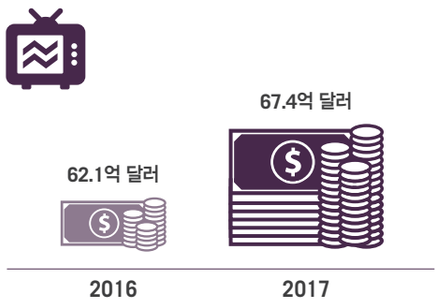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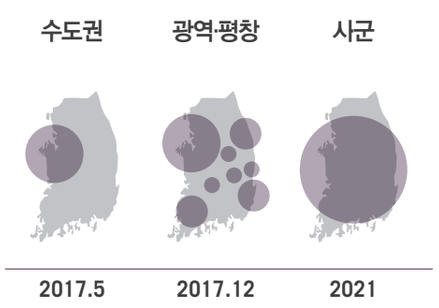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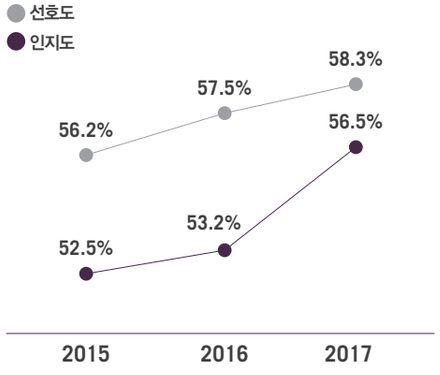
• 콘텐츠산업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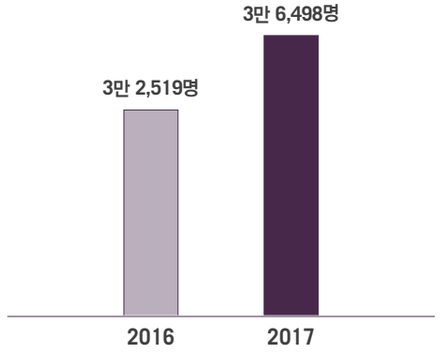
• 지상파 UHD 단계적 도입



•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



• 공공스포츠클럽 등록 회원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략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

- 일자리 인프라 확충
- 일자리 질 개선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 여성 • 신중년 • 장애인



•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수립

2022년까지 일자리 81만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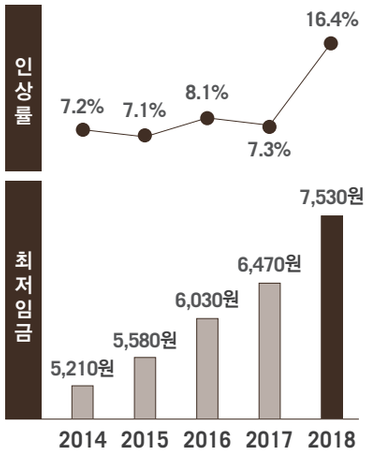
현장 민생 공무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17.4만명	34만명	30만명

• 공공일자리 창출 실적 15.5만명

(2018.3월말 현재)

현장민생 공무원	3만 5,000명
사회서비스 분야	1만 8,000명
정규직 전환	10만 2,000명

•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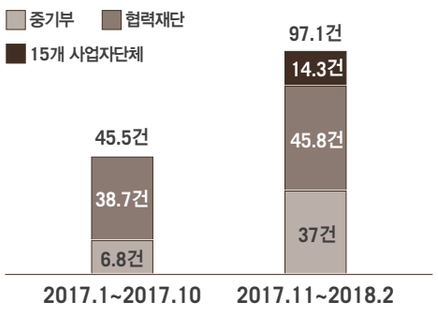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3대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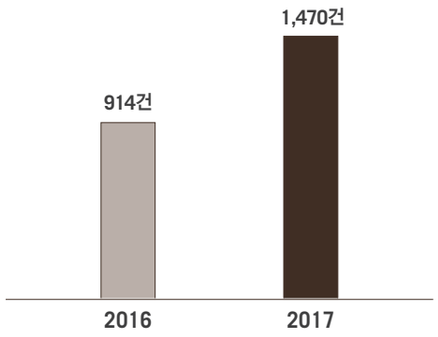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전략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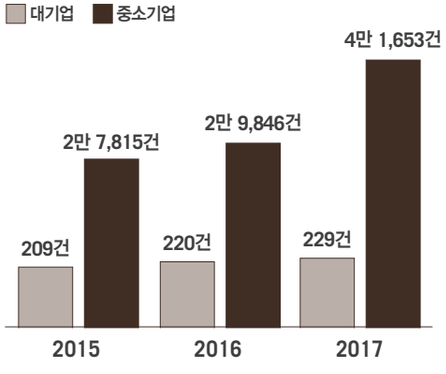
• 불공정거래 신고·상담 활성화



• 불공정거래행위 분쟁 조정 건수



• 공정거래협약체결 현황



• 하도급 분야



"좋아지고 있네요~"
6,769개 하도급 업체 중
97.2% '개선' 응답

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부당 특약
8.0% ↓	23.8% ↓	10.3% ↓
"요즘은 대금 걱정 덜해요!"	"부당 반품도 줄고, 손해도 줄고!"	"추가 비용 떠넘기기 없어서 좋아요!"

• 유통 분야



"지난해 보다 낫네요~!"
1,733개 유통납품 업체 중
91.9% '개선' 응답

부당 판매 장려금	인테리어 비용 전가
37.4% ↓	20.0% ↓
"마트 납품하는데 판매 장려금 요구가 줄었어요"	"백화점들이 예전보다는 비용을 많이 분담해서 한결 나아졌어요"

• 가맹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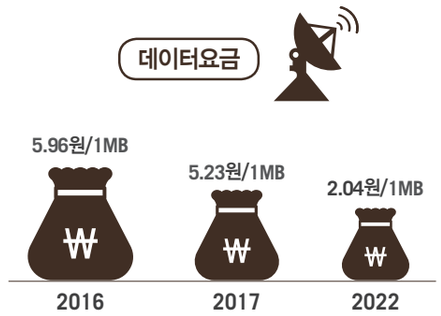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2,845개 가맹점주 중
83.3% '개선' 응답

심야 영업 단축 허용	매장 시설변경 비용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편의점 수 14.7% ↑	21.7% ↓	30.7% ↓
"손님 없는 밤시간에는 영업 쉬니까 한결 낫네요"	"부당한 인테리어 공사 강요가 덜하네요"	"계약 해지 부담이 줄었어요~!"

전략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통신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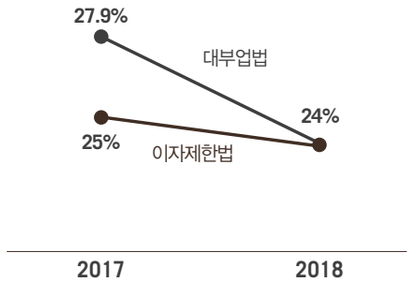
영세가맹점 – 수수료율 0.8%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 → 완화 3억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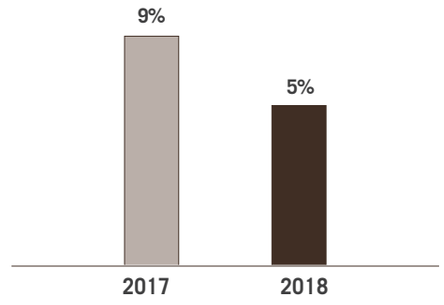
중소가맹점 – 수수료율 1.3%

기존 연매출 2억~3억원 → 완화 3억~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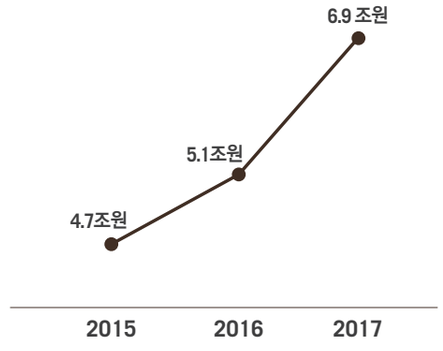
• 최고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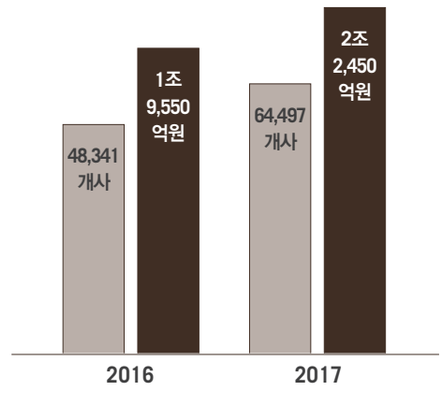
•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율 인하



•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전략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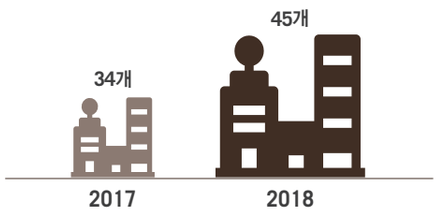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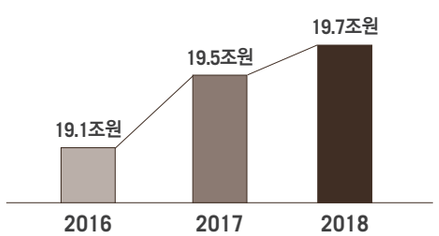
•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강화

- 5G 상용화 (2019.3)
-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2018)
- 기기 연결 1.5천만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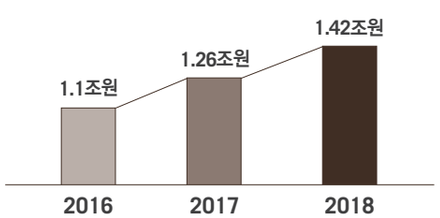
• AI 전문기업 수 증가



• 정부 R&D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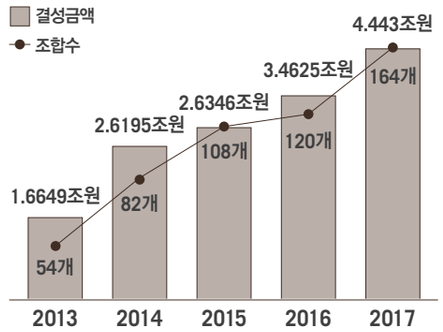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전략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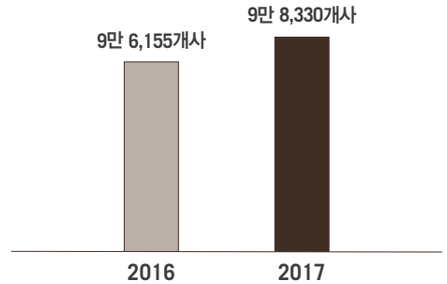
• 신규 벤처펀드 조성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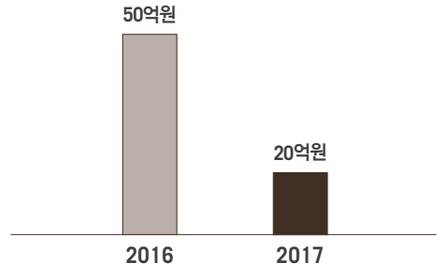
• 정책자금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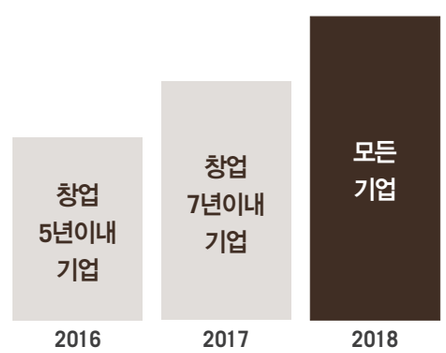
• 신설 법인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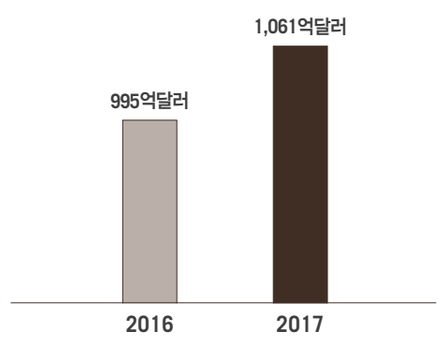
• 창투사 설립 자본금 기준 완화



• 공공기관 대출에 대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



•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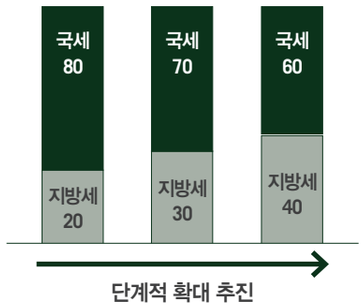
전략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자치분권 로드맵(안)

비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핵심전략	❶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❷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❹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❺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자치분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8년 7월 확정 예정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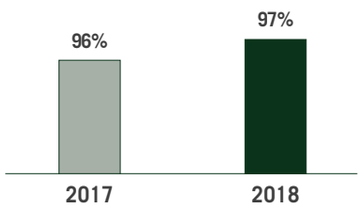


• 지자체 사업의 중앙 투자심사 대상 축소 (2017.12)

	시행 전	시행 후
시·도	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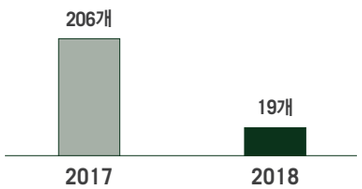
• 교육청 자체확보 예산 비중 확대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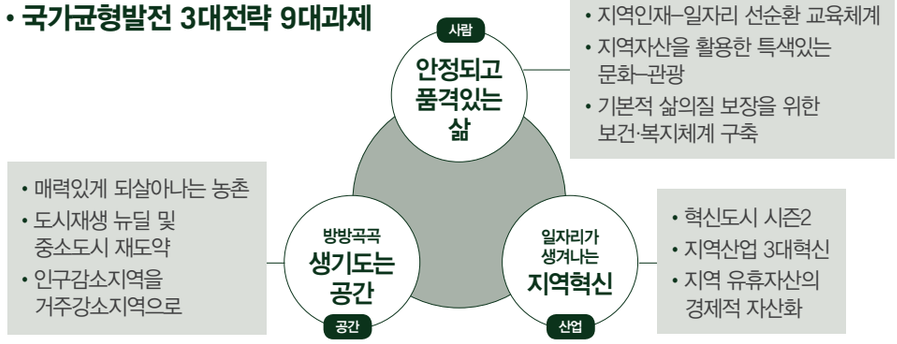
• 교육청학교 사업수행 부담 완화

국가시책사업 통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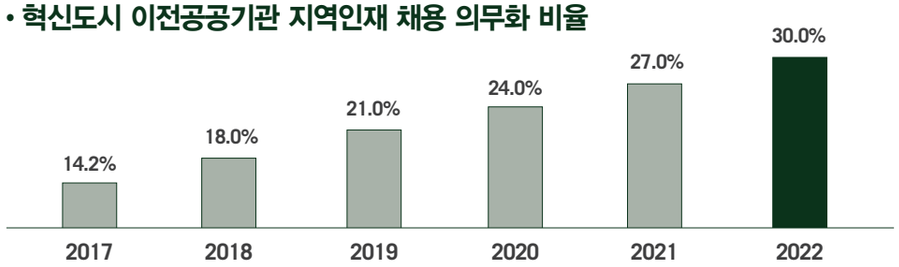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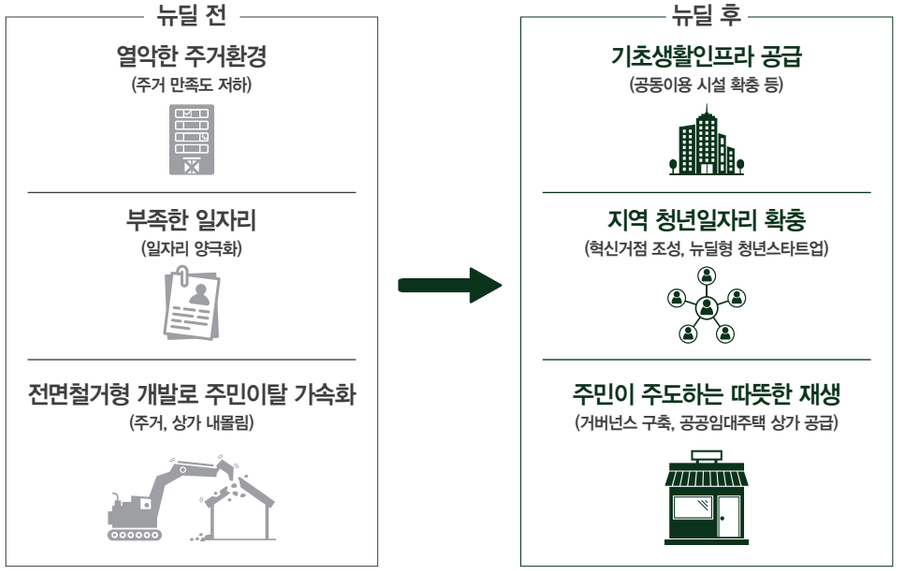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 3대전략 9대과제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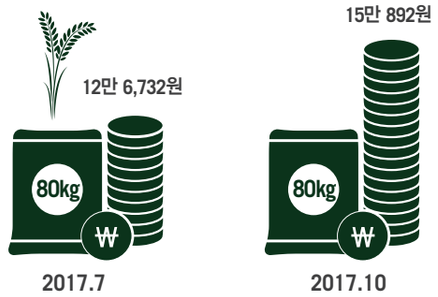
•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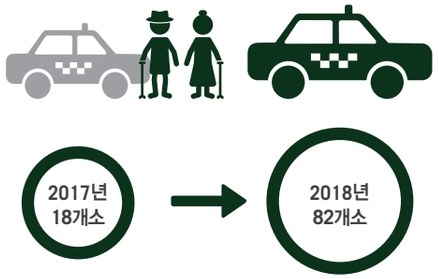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쌀 수급안정 대책 시행 (2017.9)



• 100원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



• 청년 창업농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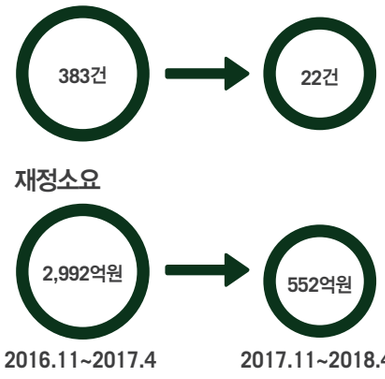
소득향상을 고려하여 연차별 차등 지원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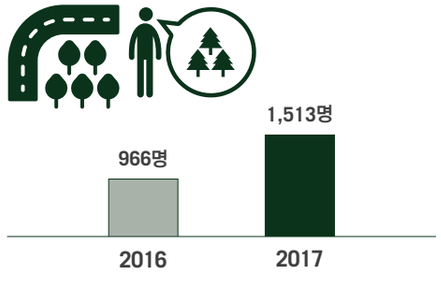
발생건수

재정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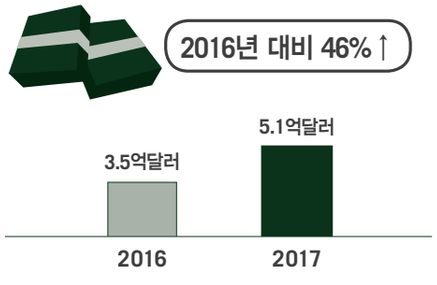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신규 일자리



• 수산물 수출 확대

김수출 5억달러 돌파




대한민국정부